



국제적 저항의 성장
영국 2백만 파업과
유럽 노동자 저항

▶ 8~9 면

이집트
혁명의 완성을
원하는 민중

▶ 4, 5 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자본주의
이후의 삶

▶ 9 면

희망버스 진로 논쟁
쌍용차로 행동을
돌리자

▶ 7 면

평가와 과제
참여당 통합 반대
운동이 남긴 것

▶ 10, 11 면

발행인_김인식 편집인_김재현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송철
등록번호_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_2009년 1월 12일
주소_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02-777-2792 팩스_02-777-0211
제보_02-777-2791 E-Mail_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99

Left21.com

제70호 2판 | 2011년 12월 3일 ~ 12월 16일 | 값 1,800원

레프트21

99퍼센트의 역습은 계속된다

한미FTA

폐기하라

» 관련 기사 2, 3, 4, 15면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라는 무리수가 부메랑처럼 돌아와 이명박을 계속 무덤으로 몰아넣고 있다. 한나라당 지지율은 20퍼센트대로 폭락했고 이명박은 뭐가 불안한지 퇴임 이후 '안전하게' 살 집을 구하느라 난리다.

날치기에 앞장선 박근혜는 하루아침에 유력 대선주자에서 '신묘 5적'으로 전락했다. 그동안 '맞춤형 복지'를 운운하며 산토끼와 집토끼를 모두 잡으려던 박근혜의 전략은 한미FTA 날치기 속에 모순이 폭발하며 물거품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날치기는 잠자던 호랑이를 깨우는 결과를 낳았다. 날치기 직후부터 거리로 쏟아진 촛불은 계속 더 뜨거워지고 커졌다. 이명박 4년 동안 쌓여 온 분노와 불만이 한미FTA 날치기를 계기로 한꺼번에 폭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불길을 잡으려고 퍼부었던 물대포도

오히려 불씨에 부채질을 한 결과를 낳았다. 온몸으로 물대포를 맞으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청년들의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투지와 용기를 심어 놓았다.

11월 26일에는 '제2의 촛불'을 우려한 경찰의 이중삼중의 원천봉쇄를 뚫고 2만여 명이 광화문 사거리를 점거했다. 물대포 협박에도 참가자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11월 30일 여의도에는 5만 명이 모였다.

매일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목이 터져라 '비준무효 명박퇴진'을 외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함께 민주노총도 정권 퇴진 투쟁을 선언하고 조합원들에게 투쟁을 호소하고 있다.

물론 '곰수의 달인' 이명박이 이대로 물러설 리는 없었다. 종로 경찰서장이 총대를 메고 나서 '자해공갈쇼'를 벌이며 시위대에게 도덕적 상처를 입히고 폭력 집합의 명분을 만들려 한 것이다.

또 인천지법 최은배 판사가 날치기를 비판하자 이명박과 우파는 이를 비난하며 반대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 동시에 한나라당은 '부자 증세', '복지예산 증액',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당근을 내밀어 대중의 분노를 가라앉히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곰수들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최은배 판사가 "뺏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퇴임 압력을 받자 이정렬 판사는 "그럼 보수편향적인 판사들도 모두 사퇴하라"며 맞불을 놓았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당근들도 "국면전환용 낚시질"이라는 냉소만 샀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이번 날치기를 보면서 "96년 12월 26일 신한국당 의원들이 새벽에 도둑고양이처럼 국회에 숨어들어와서 노동법을 날치기하던 때가 생각났다"고 말했다.

권영길 의원의 지적처럼 "날치기가 이 정권에겐 무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려면 거리의 저항을 더욱 확대·강화해야 한다.

'Occupy 서울'
제2차 국제 공동 행동의 날
일시: 12월 10일(토) 오후 4시
장소: 서울 대한문
주최: 99퍼센트 행동 준비회의

한미FTA 날치기
국회비준 무효화 및
이명박/한나라당 심판 범국민대회
주최: 야5당, 한미FTA저지 범국본
일시: 12월 10일 (토) 저녁 6시
장소: 서울 도심
촛불집회는 매일 저녁 7시에 계속됩니다.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은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누구의말을알까요?

“옳은 일은 반대가 있어도 해야 한다. 나는 반대를 많이 경험했다.”

‘내가 왕년에’ 반대도 많이 당해 봤다는 이명박

“전 세계 어떤 국회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화학무기를 의장석에 투척하는 테러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사위진압용 최루탄이

‘화학무기’라고 인정한 한나라당

“FTA는 천국으로 가는 길”

한나라당 차명진의

염장 지르는 소리

“식민지 피 지배 민족 다루듯이 굴욕을 강요하는 오만불손한 태도”

미국에게 재협상 각서를 받는 것은 안 될 일이라는 김영오.

“의원총회하는 척하며 기습 상정하는 거, 열우당 시절에 술하게 써 먹었던 방법인데 몰랐다는게 말이 되나?”

전 열우당 의원 정봉주의 폭로

“우리 모두 우는 동안 화장이나 고치는女”, “날치기 FTA 우리 모두 발끈해”

대전대에서 박근혜를

‘환영’한 학생들

“조현오 기획, 박건찬 주연, 할리우드 액션 막장 드라마”

종로경찰서장 ‘폭행’ 사건의 진실

“한미FTA 통과되는 시간이 라면 끓이는 시간보다 짧았다.”

한 네티즌

“영거주춤 오락가락 똥 싸 바지 민주당 반성하라!”

전라도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 집회에서

“최효종은 제게 짜장면이라도 사야겠습니다.”

최효종 인기가 오른 게

자기 덕분이라는 강용석

“내년 선거철이 되면 모든 후보가 물가를 잡겠다고 할 거예요. 거기서 작~은 희망을 가져 봐요.”

개그콘서트 사마귀유치원

죽을 병 주고, 반창고 주는 척하는 한나라당

한미FTA 날치기 역풍을 맞은 한나라당이 몰타기를 하고 있다.

당 대표 홍준표는 11월 27일 이명박을 만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로 부자 증세, 민생 예산 3조 원 증액을 요구했다. 심지어 부자 증세를 반대하는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의 경질도 요구했다.

28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 7천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청소 용역 노동자들은 4대보험을 보장하는 등 노동 복지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복지가 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펴 온 1퍼센트 대변 정당의 말 바꾸기를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더구나 ‘99퍼센트’를 짓밟는 한미FTA라는 핵폭탄을 날치기한 후 나타난 말 바꾸기를 말이다.

몰타기

우선 박근혜가 ‘부자 증세는 곤란하다’며 선을 그었다. 증세 대상을 놓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가까스로 의견을 모아도 이명박과 재정부 등과 원만히 합의될 리 만무하다.

지난 4년 동안 부자들 세금을 수십 조

한나라당의 생색용 부자 증세안
(상위 1만 명, 소득세 40퍼센트 5년 합계)

90조 깎아주고 4조 거두는게 부자 ‘증세’?

원이나 깎아 주고는 이제 와 그 돈의 5퍼센트도 안 되는 세금을 걷으며 부자 증세라고 할 수는 없다.

이 탐욕스런 자들이 쉽게 자기 금고를 열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비정규직 무기계약직화도 그렇다. 현행 법상 당연한 의무며, 이미 4년 전에 나온 약속을 우려했은 것이다.

게다가 무기계약직화는 정규직화를 회

피하고 차별을 고착화하는 수단이다.

그동안 이명박은 해마다 복지 예산을 역대 최대로 늘렸다고 떠벌려 왔지만, 자연증가분을 빼면 도리어 실질 복지 예산은 삭감돼 왔다. 한나라당은 그런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온 장본인이다.

제대로 복지를 늘리려면 감세해 준 돈을 다시 환수하고, 소득세뿐만 아니라 부

동산과 금융 자산에 대한 세금, 기업 법인세도 늘려야 한다. 이런 복지 확대는 대중이 직접 거리에서 투쟁을 해야만 쟁취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약 주는 사냥이라도 하게 된 것은 거리에서 불붙은 한미FTA 반대 투쟁 때문이다.

이처럼 폼수로 가득 찬 한나라당의 ‘복지 사기극’을 믿을 사람은 없다.

김문성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2심 3차 재판

폼수 검찰의 언론 탄압은 성공할 수 없다

지난해 5월 경찰이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하던 우리를 연행한 일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반민주적 공격이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지방선거를 빌미로 정부 비판과 진보적 주장을 억누르려고 시도했다.

‘미신고 집회’ 혐의로 우리를 기소한 검찰도 1심 재판에서 〈레프트21〉에 실린 기사 내용을 문제 삼으며 진정한 의도를 드러냈다.

검찰과 경찰의 반민주적 공격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많은 국내외 진보적 단체와 인사들이 우리를 방어했다. 결국 재판부도 무죄에 가까운 판결을 내려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더구나 검찰은 2심 재판도 질질 끌면서 또 다시 논점을 흐리려고 한다.

검찰은 사실조ixin청서를 〈레프트21〉 측에 보내 〈레프트21〉과 우리의 관계, 판매 과정 등 시시콜콜한 질문을 던졌다. 언론 탄압이라는 재판의 본질을 회피한 채,



언론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판매나 집회냐’로 쟁점을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또 검찰은 사실조ixin청서에서 여전히 판매를 ‘배포’라 하면서, 1심 재판에서 이

미 입증된 사실도 무시했다.

그러나 우리는 검찰의 시간을 끄는 동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미FTA 반대 촛불 집회, 노동자대회 등에서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지지금을 내서 2심 재판 비용이 마련됐다. 또 최근에 방한한 이집트 사회당 사무총장 맘두 하바시를 비롯한 해외 진보 인사들도 탄원서에 서명했다. 프랑스 활동가 크리스티 페하폰토스는 이 사건이 “중요한 문제”라며 서명 용지를 더 받아가 동료들의 서명을 받아줬다.

12월 7일에 있을 3차 재판에서 검찰은 또 다시 쟁점을 왜곡하려 들 수 있다. 만약 재판부가 최후진술 기회를 준다면, 우리는 검찰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고 반민주적 탄압을 자행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방청을 바란다.

김지태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 대책위원회 대표

우리의 분노를 대변한 김선동 의원은 죄가 없다

“진짜 테러범은 이명박과 한나라당”

필사적으로 한미FTA를 막으려 한 김선동 의원에게 조종동과 우파들이 비난을 쏟아붓고 있다. “야만적인 일”을 저지른 “테러리스트”라며 국회의원에서 “제명”하고 “고발”해야 한다고 길길이 날뛰다.

일부 우파 단체들은 김선동 의원을 검찰에 기소했다. KBS·MBC 등도 최루탄을 부각하며 날치기 문제를 가리려 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야만적인 “테러”를 한 자는 누구인가. 우리의 미래가 걸린 한미FTA를 단 4분 만에 날치기하고, 엄동설한에 물대포를 쏘아댄 이명박 정부야말로 야만스러운 “테러리스트”다.

“서민들 피눈물나게 할 한미FTA를 처리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시덕거리

는 것은 볼 수 없었다. 역지로라도 대한민국 국회가 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김선동 의원의 행동은 완전히 정당했고 우리 모두의 분노를 대변했다.

“폭탄이라도 있다면 한나라당의 일당 독재 국회를 폭파해 버리고 싶다”는 김선동 의원의 말도 백배 공감을 얻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최루액을 살포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이용섭 대변인)며 김선동 의원을 탓한다.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뒤집어쓰면서 만들어 준 기회도 이용하지 못하고서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지금 검찰은 김선동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촛불을 키워서 김선동 의원을 지키고, 한미FTA를 폐기시키자.



정선영

평범한 사람들의 눈물을 전해 준 김선동 의원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2심 3차 재판

일시: 12월 7일(수) 오후 5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2호
(2, 3호선 교대역 10번 출구)
판사: 형사항소과 제5형사부
양현주 판사
※ 원래 3차 재판은 11월 16일이었지만 검찰이 사실조ixin청서를 재판 며칠 전에야 〈레프트21〉 측에 보내 답변할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연기 신청을 했고 12월 7일로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12월 3일(토) 오후 2시 서울역
한미FTA 비준무효! 민중생존권 쟁취! 이명박 퇴진! 한나라당 해체!
2011 민중대회
주최: 민중의 힘

12월 3일(토) 오후 4시 광화문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한미FTA 날치기 국회비준 무효화 및 이명박/한나라당 심판 범국민대회
주최: 야5당, 한미FTA저지 범국민

12월 10일(토) 저녁 4시 서울 대안문
‘1%에 맞선 99%, 광장을 점령하라’
2차 국제 공동행동의 날
주최: 99%행동 준비회의

12월 10일 (토) 저녁 6시 서울 도심
한미FTA 날치기 국회비준 무효화 및 이명박/한나라당 심판 범국민대회
주최: 야5당, 한미FTA저지 범국민

촛불집회는 매일 저녁 7시에 계속됩니다.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금요일 저녁 7~8시(다음호는 12월 16일)

강남역 11번 출구 글라스타워 앞
신촌역 3번 출구 맥도날드 앞
홍대입구역 3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종각역 4번 출구
건대입구역 5번 출구 건너편 롯데백화점 앞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 앞), 풀무집(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 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 차공장 앞)

〈레프트21〉 온라인

〈레프트21〉 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 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www.left21.com



‘비준무효 명박퇴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민주당 등은 “내년 양대 선거에서 권력을 교체해 한미FTA 재협상을 이끌어 내자”고 한다. 물론 내년 선거에서 이명박을 심판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 때까지 기다리자며 투쟁의 김을 빼면 가장 좋아할 것은 이명박이다. 더구나 한미FTA라는 독약을 일단 삼킨 다음 재협상을 통해 일부 독성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한미FTA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헌법소원을 내 보수적인 사법부에 최종 결정을 맡기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사법부는 이미 언론 압박 날치기도 합헌이라고 인정한 전력이 있다.

따라서 다시 ‘피해 대책을 세우고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민주당과 국회로 공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미 한미FTA는 국회의 손을 떠난 문제다. 진보정당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정부를 정확히 겨냥해야 하고 ‘거리에서 대중투쟁을 확대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석균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자문위원의 말처럼 “국회의원들도 의원직을 버리고 국회를 박차고 나와 발효 절차를 막고, 비준 무효가 될 때까지 분노한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라”고 압박해야 한다.

한미FTA는 아직 발효된 것이 아니다. 투쟁이 더 성장한다면 실제로 폐기할 수 있다. 볼리비아의 노동자·민중은 지난 2005년 강력한 투쟁을 벌여 IMF의 강요로 민영화된 상수도 시설을 재국유화시키고 그것을 추진한 대통령을 몰려나게 했다.

2008년에도 우리는 1백만 촛불항쟁을 통해 이명박 불도저의 엔진을 망가뜨렸다. 그래서 이명박은 공공부문 민영화, 의료 민영화 등 1퍼센트를 위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미FTA 저지 운동은 이미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세 차레나 막아낸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명박은 날치기라는 무리수를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이 운동은 거리에서 강력한 에너지를 모으며 전진하고 있다. 따라서 계속 위력적인 시위와 거리 행진을 통해 운동의 규모와 힘을 더욱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 더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끌어려면 위해 이명박 정권 아래서 고통받아 온 다양한 부문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장호중



사진 (레포트21)

11월 30일 5만 명이 모인 여의도 ‘나는 꿈수다’ 한미FTA 반대 콘서트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한미FTA 저지 투쟁이 진정으로 한미FTA를 폐기시키고 나아가 정권 퇴진까지도 이룰 수 있으려면, 조직 노동자들을 주역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재벌·대기업과 기간산업의 생산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조직 노동자들의 힘이 보태질 때, 저항이 더욱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 투쟁을 선언하고 확대간부 파업을 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민주노총은 나아가 파업 등 더 강력한 행동을 건설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한미FTA가 바로 반노동 정책들의 종합판이라는 것을 알리며 노동자들의 동참을 건설해야 한다.

사실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들도 그 점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래서 저들은 한

미FTA 때문에 농업은 피해를 보겠지만, 수출 대기업 종사자들과 소비자들은 이득을 본다는 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가리며 노동자들의 시야를 흐리려 한다.

반노동 정책 종합판

그러나 한미FTA는 ‘1퍼센트를 위해 99퍼센트를 짓밟는’ 정책의 완결판이다. 한미FTA는 살인적 등록금과 전·월셋값, 비정규직 확산, 고용불안, 양극화, 청년실업, 고물가 등의 문제를 몇 배나 강하고 빠르게 악화시킬 것이다. ‘미국거주 한인여성’들은 성명에서 “맹장수술 4천만 원, 제왕절개 수술 5천만 원, 뇌종양 수술 2억 원의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다”는 얘기는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만 낮은 일이 아니”라고 했다.

무엇보다 한미FTA는 “미국식 시장경제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한국에 이식”(전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하면서 노동자들을 직접 겨냥할 것이다. <조선일보>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과정을 통하여 한국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산업별, 부문별 시야에 갇히지 말고 전체 ‘억압받는 민중의 호민관’으로서 한미FTA라는 재앙을 저지하는 투쟁의 선두에 나서야 한다. 활동가들은 이런 주장을 하며 현장에서 정치적으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그런 아래로부터 힘이 커질 때 민주노총 지도자들도 더 과감한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전지윤

한미FTA 저지 범국본

촛불을 더 키우는 데 매진해야

11월 22일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 이후 분노한 시민들이 연일 거리로 나서고 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올바르게도 ‘비준 무효’ ‘이명박 퇴진’ ‘한나라당 해체’를 핵심 기조로 범국민항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에게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장외 투쟁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범국본은 여전히 대중적 저항보다 민주당과의 공조에 미련을 두고 있다. 범국본을 주도하는 한국진보연대 일부 간부들은 민주당과의 공조를 위해 범국본의 핵심 기조인 ‘이명박 퇴진’ ‘한나라당 해체’ 요구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범국본은 민주당의 오락가락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 11월 26일 집회 때 민주당 대표 손학규가 시민들에게서 엄청난 야유를 받으면서도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자”며 투쟁 회피성 발언을 했는데 범국본은 침묵했다.

다함께 같은 급진 좌파 활동가들의 이런 비판과 제안이 충분히 수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범국본 상황실을 충분히 개방적이고, 협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범국본의 최고 결정기구인 대표자회의도 향후 투쟁 계획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지 민주당과 협의한 내용을 보고하는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

더 많은 단체와 개인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영준

민주당에 주도권을 주거나 끌려가지 말아야

11월 26일 한미FTA 반대 집회에서 손학규가 발언에 나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퍼부었고 “사퇴해” 하며 구호를 외쳤다. 날치기 전까지 계속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무기력하게 날치기를 자초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약속을 누가 믿을 것인가? 민주당은 한미FTA를 체결한 정권을 계승한 당이다. 또 김진표 원내대표가 한나라당과 ‘선 비준 후 ISD 협상’이라는 문서에 서명까지 했다. 계속 후퇴해 한나라당에게 강행 처리 비준의 빌미를 제공했다. 결국은 제대로 된 반대 투쟁 한 번 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한미FTA를 통과시켰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김진표 원내대표를 유임시켰다.”(우석균 한미FTA범국본 정책자문위원)

비록 정동영·천정배 등은 한미FTA 반대 투쟁을 선동했지만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반대하는 시늉만 했다.

이런 민주당의 동요와 분열이 날치기에 길을 열어 줬다. 민주노동당이정희 대표도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에 명분을 준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동요와 분열

날치기 이후에도 민주당의 동요는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톨이라도 예산을 따내고 싶어 ... 날치기 이후 불과 이틀 만에 ‘원외투쟁론’과 ‘원내복귀론’으로 나뉘고 있다.”(<한겨레>) 박지원은 “국회에서 투쟁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다며 운을 떼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 다수가 참여정부 때 한미FTA를 추진한 장본인들이니 사실 놀랄 것도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 첩자’ 김진표는 경제부총리와 장관까지 지낸 참여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인사다. 게다가 손학규는 “한나라당서 파견되신 분”(공지영)이다. 안희정, 송영길 등은 대놓고 ISD까지 옹호했다. 따라서 문제는 일부 협상파가 아니라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민주당은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고 ‘99퍼센트’의 눈치를 보지만, 그 당의 계급적 기반과 정책은 ‘1퍼센트’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한미FTA를 진정으로 반대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을 운동에서 내칠 필요는 없지만, 결코 민주당을 신뢰하거나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주도권을 쥐게 해서도 안 된다. 좌파는 민주당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유로 운동에 손을 떼지도 말아야 하고, 민주당을 추수하며 방향을 잃어서도 안 된다. 투쟁 속에 개입하면서 운동의 성장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장호중

폴라주 63

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1%를 위해 국민건강도 팔아먹는 제 이름은 협잡꾼이에요.

건강보험 토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영리병원 추진문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알리면 되요~
그정도로 토개지나요요? 그래서 건강보험 해체문자를 건보공단 이사장에 알렸어요~
다음 정권 때 다시 돌릴 수 있는 거 아니나요요? FTA가 발효되면 절대 못돌리답니다~



임루전

김영삼의 무덤이 된 1996년 날치기의 추억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전문 날치기꾼'으로서 역사와 뿌리가 깊다. 1996년 겨울에도 신한국당(한나라당의 전신)은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안의 날치기 통과를 감행했다.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하고 안기부(현 국정원)에게 수사권을 준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1996년부터 위험한 고비에 처한 경제 상황이 날치기의 배경이었다. 지금 세계경제 위기 상황이 한미FTA 날치기의 배경이듯이 말이다.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는 게 해결책이라고 본 김영삼 정권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성탄절 다음 날 모두가 잠자고 있던 새벽에 쥐떼처럼 국회로 몰려가 날치기를 했다. 그것은 거대한 후폭풍을 불러왔다. 날치기 당일 아침부터 기아차를 선두로 노동자들은 봇물처럼 파업 투쟁에 나섰다. 첫날에만 15만 명이 파업을 벌였고 이튿날 20만 명으로 늘었다. "민주시민 동참하라"를 연호하며 도로를 점거해 행진하는 집회 대열은 종종 순식간에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늘어났다.

교수·변호사·종교인의 지지선언이 줄을 이었고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도 만들어졌다. 김대중의 국민회의(민주당의 전신)도 싸우는 시늉을 했다. 사실, 국민회의는 노동법 개악이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다"는 입장이었다. 지금 민주당이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지 않듯이 말이다.

1997년 초까지 이어진 파업은 사무전문직과 공공부문이 가세하면서 파업 규모가 37만 명으로 늘었다. 부산·마산·울산에서도 노동자들은 가두 투쟁을 벌이며 시청으로 행진했다. 파업 지지율은 무려 75퍼센트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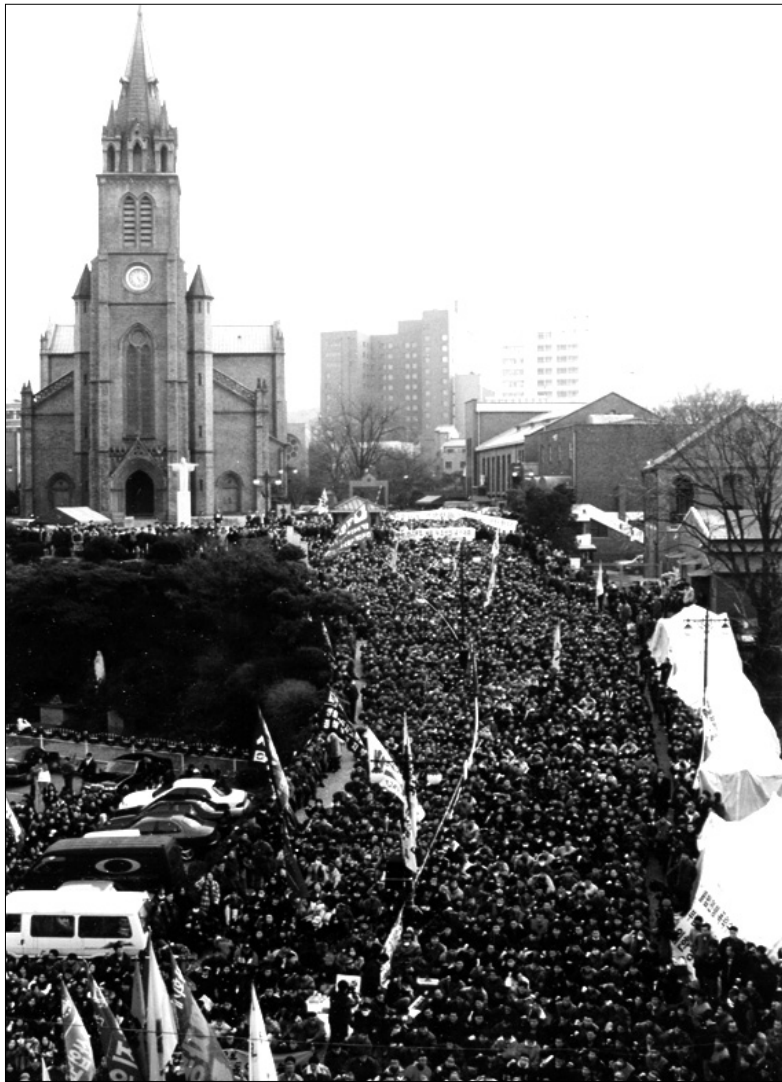
김영삼 정권은 강경파와 유화파로 분열했고 결국 1월 21일 '노동법 재개정'을 발표했다. 김영삼은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다. 그 후 김영삼 정권은 레임덕을 넘어 '산 송장'이 돼 버렸고 연말 대선에서 김대중으로 정권이 교체됐다.

투쟁을 이끌었던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도 당시 대선에 출마했고 이후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졌다. 투쟁이 낳은 급진화로 김대중과도 구분되는 진보정당의 필요가 제기됐던 것이다. 이 투쟁은 신자유주의를 막아 낼 수 있다는 희망을 전 세계에 보여 줬다. 당시 유명한 국제 검색사이트인 알타비스타의 검색어 1순위가 '한국 총파업'이었다.

당시 투쟁을 더 밀어붙일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민주노총 지도부와 범대위 지도자들은 "대선에서 심판"하자며 김을 뺐다. 결국 주도권은 제도권으로 넘어갔고, 대통령이 된 김대중과 민주당 정부는 IMF 위기 속에 개악안을 부활시켜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노동자들의 잠재력과 민주당의 한계를 보여 준 1996년의 경험은 이명박의 날치기에 맞서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 준다.

전지윤



1996년 12월 노동법 날치기에 항의하며 파업을 벌이고 명동 성당 앞을 가득 메운 노동자들

사진: 최정호

실패하는 자해공갈쇼와 이간질 시도

종로경찰시장 박건찬 '폭행' 사건이 쇼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박건찬은 이정희 의원 등이 만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도 사복에서 경찰복으로 갈아입고 시위대 열 안으로 진입했다.

엄동설한에 '살인병기' 같은 물대포를 쏘아댄 책임자가 나타나 집회 대열을 헤집고 들어온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뻔하다. 그래도 겨우 모자가 벗겨지는 수준에서 그친 것은 시위대가 발휘한 엄청난

자제력을 보여 준다.

그런데 박건찬은 곧바로 준비된 기자회견을 열어서 시위대에 폭행 당했다며 업살을 떨었다. 이명박의 눈에 들어 출세하려는 게 뻔히 보였다. 조종동도 기다렸다는 듯이 이 자해공갈쇼를 1면에 띄우며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경찰은 "물대포를 안 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고 이명박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곧 이 '할리우드 액션'의 전모가

드러나고 폭행 누명을 쓴 사람의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저들은 궁지에 몰리고 있다.

한편 이명박과 우파는 특정 단체들을 마녀사냥해서 운동을 분열시키려 한다. 진보연대, 다함께, 한대련 등 한미FTA 저지법국본 내 주요 단체들을 겨냥해 이들이 '순수한' 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시킨다고 이간질하는 것이다.

투쟁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

며 헌신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단체들을 나머지 사람들과 분열시켜 결국 운동이 패배로 나가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악성 댓글로 도배된 인터넷 게시판이나 그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은 조종동을 제외하면 실제 집회 현장에서 이런 이간질은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미FTA 반대 운동은 이명박의 탄압과 이간질에 맞서서 단결해 싸워야 한다.

장호중

〈동아일보〉의 다함께 마녀사냥에 대해

‘이명박의 혀’가 하는 거짓말을 듣고 흔들릴 사람은 없다

이 글은 지난 11월 29일 〈동아일보〉 보도에 대한 다함께의 논평을 축약한 것이다. 전문은 다함께 웹사이트나 〈레프트21〉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현재 이 나라의 지배자들이 한미FTA 저지 투쟁의 성장을 보면서 느끼는 위협감이 상당한 것 같다. 이 점은 저들이 한미FTA 저지 투쟁을 향해 인간됨을 쓰며 쏟아내는 악선동과 마녀사냥 시도만 봐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 '다함께'가 저들의 주된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듯하다. 지난번 〈뉴데일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동아일보〉가 우리를 음해·매도했다. 그 수준 낮음과 저열함은 막상막하다.

정신 나간 우익들이 우리를 주된 표적으로 삼는 것은 한편으로 성가시지만, 다른 한편 그만큼 우리가 한미FTA 저지 투쟁에 앞장서서 헌신한 것의 반영일 것이다.

〈동아일보〉는 1퍼센트 지배자들을 위해 저열한 마녀사냥을 하기에 책임자라 할 수 있다. 〈동아일보〉는 대표적 수구언론이며 친이명박 언론이다. 수많은

MB팬들이 〈동아일보〉 출신이다. 이런 '이명박의 혀'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얼마 없겠지만 몇 가지만 답하고자 한다.

〈동아일보〉는 11월 29일자 기사 "FTA 집회에 나타난 '마스크' 쓴 사람들 정체는"에서 우리를 "치고 빠지는 '상습 집회몰이꾼'"이라고 매도했다. '다함께'가 집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유발"해 놓고 "홀연히 사라져"서 "시민들 가운데 이들 몰이꾼을 따라갔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먼저 이런 황당한 소설이나 쓰는 〈동아일보〉의 빈곤한 상상력에 한숨만 나온다. 이 '소설'에 따르면 '다함께'는 신출귀몰하기 이를 데 없다. 집회 참가자와 경찰들이 원하지도 않은 "충돌"과 "연행"을 하도록 "유발"하고 "홀연히 사라"지길 반복하니 말이다.

결국 〈동아일보〉의 논리는 이명박의 한미FTA 날치기와 엄동설한에 물대포 발사, 마구잡이 시위 진압과 폭력 연행이 아니라 '다함께'가 이 모든 불상사의 원흉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불의한 정부와 정책에 맞서 연행도 무릅쓰고 용기있

게 투쟁한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다함께는 경찰의 탄압에 맞서 시위대와 함께 물대포를 맞고 시위와 행진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다함께 회원들이 깃발과 팻말을 들고 물대포를 맞고 있는 장면은 기성 언론과 방송에도 나온 사실이다. "홀연히 사라"지는 단체라면, 왜 그토록 많은 다함께 회원들이 연행, 소환, 벌금 등에 시달리고 있겠는가.

황당무계

〈동아일보〉는 또 "다함께는 FTA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종북단체"라고 매도했다.

그러나 다함께는 누구보다 일관되게 한미FTA에 반대해 왔다. 그리고 이것은 다함께의 반자본주의 입장과 전혀 대립, 모순되지 않는다. 1퍼센트 가진 자들을 위한 한미FTA 추진은 기업을 이윤을 위해 평범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잘 보여 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다함께가 "종북단체"라는 말도 근거 없다. 다함께는 그동안 북한이 남한과 마



물대포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하는 다함께 회원들

는 온갖 악의적 헛소문들이(이 내용 중 상당수는 경찰 '알바'나 프락치가 썼을 듯하다)을 사실인 양 인용하며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게시판에서조차 이미 이런 글들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고, 많은 반박 댓글이 달리고 있다.

2008년 촛불시위와 그 이후의 온갖 고비에서 다함께와 함께 투쟁해 온 수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마녀사냥은 더욱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강력한 투쟁을 주장해 온 좌파단체에 대한 마녀사냥을 통해 한미FTA 저지 투쟁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분열시켜서 이 투쟁을 실패하게 만들려는 것이 〈동아일보〉의 의도다.

다함께는 이런 저열한 마녀사냥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한미FTA 저지 투쟁에 헌신할 것이다. 이명박에 맞서 한미FTA 저지 투쟁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우리를 방어해 주고, 우리와 함께 협력해서 이명박과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믿는다.

2011년 11월 29일
다함께

한미FTA 반대 부산 시위 좌절이 아니라 분노로 가득찬 사람들

22일 저녁, 한미FTA 날치기 소식이 알려진 지 3시간 만에 4백여 명이 부산 서면 주디스 태화 앞 거리를 가득 메웠다.

부산 지역의 진보적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두루 참석했고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활동가들도 보였다. 특히 얼마 전 조남호를 몰러서게 한 한진중공업 지회가 참가해 주목을 받았다. '소울 드레서' 등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과 개인들도 많이 참가했다.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 하는 좌절이 아니라 '어떻게 복수하지' 하는 분노로 들끓었다. 집회를 마친 후 누군가 "행진합시다" 하고 외쳤고 참가자들은 서면 도로로 쏟아져 나와 서면 일대를 한 바퀴 행진했다.

복수

비준안이 처리된 후 1주일 동안 집회는 계속됐다. 매일 4백~5백여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행인들은 촛불 집회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너도나도 초와 손팻말을 받아 갔다. 구경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촛불 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토론도 시작되고 있다. 이 속에서 다함께 부산 회원들은 자유발언과 〈레프트21〉 등 간행물 판매·배포 등을 통해 운동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토요일에 한 참가자가 자유발언에서 '집회해도 못 막으니까 야권통합당을 만들어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야유가 쏟아져 나왔고 반박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당도 한나라당과 함께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촛불문화제는 매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서면 주디스 태화 앞에서 열린다.

박연오

이집트 민중의 분노가 폭발하다

이집트 혁명이 고비를 맞고 있다. 이집트의 혁명적 사회주의자인 사메 나기브가 투쟁 상황을 전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 전국의 광장들을 가득 메웠다. 거리에 나선 사람들의 수는 어마어마하다.

이집트 제2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가 크게 들끓고 있고, 수많은 학생이 행진을 벌였다. 사람이 매우 드문 아스완 같은 남부 도시들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여기 타흐리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이와 노동계급이다. 광장 곳곳에 바리케이드가 세워져 있다. 경찰이 광장에 진입하려 시도하지만 매번 저항에 밀려 되돌아가고 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두고서 최고군사위원회는 분열했다.

군부의 일부는 분명히 전력을 다해 우리를 진압하려 한다. 광장 둘레 곳곳에서 군대의 광장 진입을 막으려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나 군부의 다른 일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군대의 결속을 깨뜨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일찍이 보지 못한 잔인한 것이다. 타흐리르 광장에서만 지금까지 수십 명이 살해됐다.

도처에서 사람들이 죽어 갔다. 군대는 시체를 거리에 함부로 내동댕이쳤다. 파시스트와 다름없는 짓을 벌인 것이다. 2천 명 이상이 다쳤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중상이다.

경찰과 군대는 끔찍하게 지독한 최루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 새로운 최루가스는 그들이 이전에 사용했던 것들과 완전히 다르다. 이 가스는 호흡 곤란, 구역질, 방향감각 상실을 일으킨다.

단계

경찰과 군대는 이 최루가스를 어마어마하게 사용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흰 연기가 거대한 구름을 이룰 정도다. 이 가스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마신 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숨이 막히는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그런 폭력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매우 놀라운 용기와 힘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1월 29일의 싸움에서 한쪽 눈을 잃은 아흐메드 하라라라는 사람을 알고 있다. 아흐메드는 한쪽 눈에 그 날짜가 쓰인 안대를 하고 다녔다. 이번 일요일 타흐리르 광장 싸움에서 그는 다른 한쪽 눈마저 잃었다. 아흐메드는 이제 11월 20일이라고 쓰인 두 번째 안대를 했다. 그리고 그는 오늘밤 여전히 우리와 함께 광장에 있다.

군중의 혁명적인 분노는 1월보다 훨씬 거대하다.

이제 보안경찰은 광장을 되찾을 만한



타흐리르 광장에서의 시위

군부의 학살에 맞서 놀라운 용기와 투지를 보여 주는 이집트 민중. 거리의 투쟁과 노동자 파업이 이집트 혁명을 전진시킬 수 있다.

힘이 없는 듯이 보인다. 그들이 광장을 장악하려면 대규모 학살을 자행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형편없이 계획된 반혁명일 것이다. 역사 속에서는 흔히 반혁명 시도가 혁명에 박차를 가한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사람들은 군부가 총선 이후에도 권력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최근까지도 긴가민가 했다.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 사람들은 군부야말로 우리의 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이집트 사람들은 단순히 군부의 수장인

탄타위의 퇴진만을 원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이제 탄타위가 이집트 사람들에 저지른 범죄의 죄값을 묻고 싶어 한다.

거리에는 분노가 가득하며 내각 총사퇴만으로는 이것을 가라앉힐 수 없다.

이 혁명은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일어나고 있다.

배경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임금은 여전히 임에 풀칠할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노동자 투쟁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또다시 커다란 파업 물결이 일어날 가능성이 확실하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 노동자 운동이 중

요한 구실을 할 것이다. 자신감이 커졌을 뿐 아니라 경제 위기의 영향 탓에 노동자들은 반격에 나섰고 새로운 독립노조를 세웠다. 새로운 독립노조연맹은 최근의 시위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다.

정치 투쟁은 노동자 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 투쟁에 새로운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 결과 이러한 경제 투쟁이 거리의 운동을 강화할 수 있다.

우리는 노동자들 속에서 이 정권을 끝장낼 전국적 총파업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당신들이 처음에 혁명을 구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또다시 혁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결정적이다

2월에 무바라크가 몰락한 이후 최초로 독립적이고 합법적인 노동조합들이 생겨났다. 보건의로 노동자들이 병원들을 점수했다. 노동자들은 경영자들을 쫓아내고 새로 선출했다. 학생과 교사들은 수업 내용을 짝 바꿨다.

지역마다 혁명적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저항을 계속한 사람들은 투옥되고,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

그래서 이번 저항에는 무바라크 몰락 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

지금은 혁명의 중요한 고비고 노동자 운동의 구실이 중요하다. 무바라크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했던 것도 노동자 총파업이었다. 조직 노동자의 힘이 최근의 대중 시위와 단단히 결합하면 장군들도 물러나게 할 수 있다.

서방 지배자들은 중동의 독재자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고 이집트 군부를 비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리비아에서도 자신들과 거래할 정권을 수립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전 세계 활동가들은 혁명의 미래를 지키려고 투쟁하는 이집트 민중과 연대해야 한다. 우리의 정부들에 이집트 군사 정권과 모든 거래를 끊으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결국 혁명의 미래는 수많은 평범한 이집트 사람들의 행동에 달려 있다. 이집트 민중의 투쟁은 바로 우리의 투쟁이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사회주의자들의 구실

“이집트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이집트에서 활동하는 가장 중요한 급진 좌파 조직 중 하나다. 우리는 특히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수에즈와 만수라에서 많은 활동을 벌인다. 우리는 군부 정권의 본질을 폭로하고 노동자들이 어떻게 혁명을 전진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정치 구호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좀더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에서 우리는 조직으로서 1월 혁명 때보다 훨씬 가시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다른 정치 세력들은 혼란돼 있고 장군들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시위에서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타흐리르 광장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을 압니다. 당신들은 처음부터 최고군사위원회에 반대했죠. 당신들과 함께 활동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우 신문을 펴낸다. 광장에서 보안군과 충돌이 발생하는 와중에도 우리는 신문을 광장으로 가져온다. 우리의 청년 동지들은 정말 용감하다. 그들은 모든 전투에서 선두에 나선다.

우리의 영향력은 우리의 조직 규모보다 크다. 우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장 일관된 혁명가로 여긴다.

사메 나기브

본색이 드러난 군사 정부

이집트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지금 이집트 대중이 맞닥뜨린 질문이다.

지금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는 장군들은 자유 선거는 약속했지만, 경제와 대외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 골몰하고 있다. 사실 장군들은 이집트를 무바라크 정권 때 하던 대로 다스리길 원한다.

타흐리르 광장에서 벌어진 살인 만행은 군부 지배자들이 어떻게 나아가고자 하는지 보여 줬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신뢰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

는 이집트 사람은 거의 없다.

군부는 거의 60년 동안 권력을 쥐고 있었다. 이 권력을 움직이는 것은 특권과 부를 누리는 장교들이다. 그들은 무바라크 시대에 흥행하던 부패에서 이득을 얻었다.

2월에 엄청난 시위와 총파업에 직면해서야, 장군들은 마지못해 무바라크의 퇴진을 받아들였다. 이제 장군들은 새로운 무바라크가 됐다. 대중은 군부가 권력을 포기해야 하고, 민중이 자기 미래를 결정하고, 혁명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집트의 사회주의자들은 총파업을 벌여 거리의 운동과 작업장의 투쟁을 결합시키자고 호소하고 있다.

최근의 위기는 많은 기성 정당의 한계도 폭로했다. 장군들에 반대하는 시위를 마지못해 지지했던 무슬림형제단은 더는 행동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분노한 시위대는 최근 무슬림형제단이 만든 자유정의당의 지도자인 모하메드 엘벨타기를 타흐리르 광장에서 쫓아냈다.

필립 마블릿

총선이 민주주의를 가져올까

이집트에서 총선이 진행됐다. 동시에 카이로와 주요 대도시에서는 거의 매일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시위대는 최고군사위원회가 몰러날 것을 요구한다. 보안군이 시위대를 공격하면서 42명이 죽고 2천 명이 다쳤다.

장군들은 카말 간주리를 신임 총리로 임명했다. 그러나 간주리는 새로운 얼굴이 아니다. 그는 18년 동안 독재자 무바라크에게 봉사했던 인물이고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총리였다.

간주리의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외쳤다.

최고군사위원회 의장인 장군 탄타위는 지난주 자신이 주도해 2012년까지 민간 정부에게 권력을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위대는 당장 물러나라고 외쳤다.

정부는 앞으로 석 달 동안 계속될 선거가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독립 후보는 최근 시위대 공격에 항의해 후보에서 사

퇴했다.

카이로에서 활동하는 와심 와디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투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 선거와 다릅니다.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찾기 힘듭니다.

“장군들이 특하면 끼어들 것이기 때문에 새 의회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최근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무슬림형제단이 이번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을 것

이다. 그러나 변수는 시위대의 연대 호소에 노동자들이 얼마나 호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이집트에서는 사활을 건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중은 여전히 방독면과 돌멩이만으로 무장한 채 이집트 혁명이 수많은 이집트인의 희망을 실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투쟁하고 있다.

주디스 오어

세계를 뒤흔든 1년

투쟁 속에서 세상과 자신을 바꾼 이집트 민중

열 달 전에 수많은 이집트 사람들은 위대한 혁명을 일으키고 독재자를 내쫓았다.

혁명은 1월 25일 시위로 시작했다. 이날 밤 늦게까지 경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전 세계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비무장 시위대가 막강한 보안군과 경찰에 맞서는 것을 바라 봤다.

이집트 경찰은 후퇴했다. 군대가 타호리르 광장으로 진입할 때 시위 참가자들은 “군과 민중은 하나다”라고 외쳤다.

그러나 무바라크는 권좌에서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혁명이 갈림길에 들어섰다.

그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노동자 수십만 명이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사장들을 내쫓고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

었다.

노동자들은 이집트 혁명을 질적으로 심화시켰다.

노동자 파업이 시작되자 혁명은 더 많은 곳으로 확산됐다. 그리고 결국 무바라크는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수많은 작업장에서 투쟁이 벌어지면서 사장의 독재와 정부의 독재 사이의 밀접한 연관 관계가 폭로됐다. 이집트에서 공기업 사장은 집권당의 충성스러운 당원이기도 했다. 이런 자들은 이제 “꼬마 무바라크”로 불리게 됐다.

무바라크가 물러난 후, 자유주의 정치인들, 무슬림형제단 지도자와 장군들은 이집트인들에게 이제 자기 일로 돌아가라고 설득했다.

그들은 이집트의 정치·사회적 권력 구조를 그대로 보존하려고 했다. 그러나 파업은 계속됐다.

수많은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은 적정

임금, 일자리 보장, 부패 종식과 ‘꼬마 무바라크’ 제거 등 다양한 요구를 제기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더 멀리 나아가 임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공공 서비스 투자 확대 등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똑같은 정치 엘리트와 장군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물었다. “1월 28일 우리 자식들이 너희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단 말인가?”

부활

혁명 발생 이전에 이집트에는 독립노조가 네 개 있었다.

그러나 혁명 이후 1백여 개 독립노조가 건설됐다. 이집트 독립노조연맹에는 노동자 1백40만 명이 속해 있다.

한편, 사람들은 타호리르 광장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1월 항쟁에서 시위대 8백 명을 죽인 경찰들을 신속히 처벌할 것을 장군들에게 요구했다. 그러

나 최고군사위원회는 광장에 모인 시위대를 잔인하게 공격했다.

파업과 시위가 불법이 됐고 군사 재판을 받고 1만 2천 명이 수감됐다.

그러나 파업은 갈수록 커졌고 잘 조직됐다. 9월에 노동자 50만 명이 투쟁을 벌였다.

장군들은 10월 9일 끔찍한 만행을 벌이는 것으로 응수했다. 장갑차가 자기 권리를 요구하는 콥트교 시위대를 공격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 타호리르 광장으로 돌아왔고 장군들을 비난했다.

최근 대규모 시위가 다시 부활한 것은 이집트 혁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잘 보여 줬다. 수많은 이집트 민중은 크고 작은 행동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켰고, 이 과정에서 그들 자신도 변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2280호
번역 김용욱



올해 2월 무바라크 퇴진을 위해 파업을 벌인 가스산업 노동자들. 수많은 이집트 민중이 행동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그들 자신도 변화시키고 있다.

이집트 혁명에 연대한 한국 운동

“살인 진압 중단하고, 이집트 군부 퇴진하라”

한국에서도 이집트 군부의 학살을 규탄하고 이집트 혁명에 연대하는 움직임이 건설됐다.

한국에 있는 이집트인들이 만든 단체인 ‘이집트 혁명을 지지하는 이집트인들’과 한국의 여러 시민·사회·종교·노동 단체들이 함께했다.

11월 25일 이집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추운 날씨에도 50여 명이 모였다. 이날 시위는 영국·아일랜드·캐나다·스웨덴·독일 등에서 동시에 벌인 국제 공동행동의 일부였다.

‘이집트 혁명을 지지하는 이집트인들’의 칼리드 알리는 집회에서 이집트 상황을 전하며 연대를 호소했다.

“지금 이집트 군부는 자유·인권·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민중을 전쟁처럼 총살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만으로도 40여 명이 죽었고, 수천 명이 부상했습니다. 여성들은 성폭행과 강간을 당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군부 전체가 퇴진해야 합니다. 민중이 자신들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노총 정책성 부위원장은 한국에서의 군부 독재 경험을 이야기 하며 이집트와 한국 민중이 서로에게 배우자고 말했다.

“이승만 정권이 쫓겨난 뒤, 박정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각자의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집트 군부 정권도 내년에 대선을 실시할 테니 나서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군부정권의 술책일 뿐입니다.”

혁명과 반란

김인식 다함께 운영위원은 이집트 군부가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세계는 혁명과 반란과 투쟁의 도가니입니다. 미국 월가 점령이 벌어지고, 유럽 노동자들은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 FTA 폐기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운동의 시작은 지난봄 이집트와 튀니지의 혁명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운동에 큰 영감을 준 이집트 혁명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집트 군부의 어설픈 시도는 완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반혁명의 채찍이 혁명을 전진시킨다는 말이 지금 이집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바라크를 몰아내는 데 결정적 구실을 한 노동계급이 이 혁명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예수살기에서 활동하는 최한국 목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상황에도, 팔뚝에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써 놓고 시위에 나가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집트 시위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집트 혁명을 지지하는 이집트인들’과 한국의 단체들은 앞으로도 연대 행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선영

‘세계이주민의 날’ — 이주민들과 연대해 차별에 도전하자

이정원 이주공동행동 기획위원

다가오는 12월 18일은 UN이 정한 ‘세계이주민의 날’이다. 1990년 UN이 제정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협약’은 2003년 발효됐으나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이 협약을 이행하기는커녕 비준도 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계속 체류 외국인 수가 늘고 있다. 현재 체류 외국인이 1백40만 명을 넘었고 약 1백만 명이 장기 거주하는 이주민들이다. 이들 중 약 70만 명 이상이 이주노동자고 결혼 이주민도 15만 명에 가깝다.

그러나 이들의 처지나 권리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직장을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고 특하면 비자를 박탈당해 미등록 처지로 내몰

린다. 단속·추방도 여전히 되풀이되며 이 과정에서 사망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이주노조는 여전히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주노조 간부들은 정부의 표적이 돼 왔다. 외국인 범죄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왜곡해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 부활 등 통제를 강화했다.

또 정부는 결혼 이주자들의 ‘사회 통합’이 중요하며 되레 귀화 절차와 심사를 강화했다. 심지어 이른바 ‘공산권’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는 서약까지 요구한다.

얼마 전 필자는 서울출입국관리소 민원실에서 베트남 아내와 함께 온 남편이 “아내가 귀화 심사 때 애국가 2절을 부르지 못해 떨어졌다. 그런데 나도 애국가 2절을 모른다”고 하소연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내가 옆에서 보기 딱해서 말을 붙이자 그 남편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번에는

광복절이 무슨 날이냐는 질문에 답을 못해 떨어졌다”고 했다.

한국이 난민 협약을 비준한 지 20년이다. 하지만, 난민 신청자 3천6백82명 중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고작 2백53명에 그친다.

위선

이런 현실은 그동안 정부가 내세워 온 ‘다문화 환경 조성’과는 거리가 한참 멀 뿐 아니라 다문화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다.

여러 해 동안 한국 내 이주민들과 여러 이주·인권 단체들이 점점 더 나빠지는 이주 정책을 규탄하며 정부에 이 협약 비준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침범 정부답게 이민 정책에도 서열과 차별을 강화해 왔고,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이주민과

그렇지 않은 이주민으로 이간질까지 하고 있다. 가난한 국가 출신 유색인 이민자들은 날로 높아지는 규제 장벽을 실감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주민의 날은 모든 이주민들이 함께 기뻐하며 기념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차별을 규탄하며 투쟁하는 날이기도 했다. 이날 이주민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자유로운 노동 보장, 결혼 이민자와 난민의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거리 행진을 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집회 한 번 열기가 쉽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주노동자들이 집회를 열고 활력적인 행진을 하기로 결정했다. 몇 달 전부터 이주노조가 주축이 돼 여러 이주노동자 공동체들과 이 집회의 요구, 프로그램, 재정 등을 마련하며 준비를 해 왔다.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은 ‘세계 이주민

의 날’은 “한국 사회에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기여를 보여 줄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일부이며 한국인과 이주민 사이에 더 나은 이해를 증진해야 합니다”라고 이주자들의 참가를 호소했다. 또 “이날은 단속추방 반대, 고용허가 기간 연장, 이주아동과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 차별·성차별 반대, 노동자이자 인간으로서 권리 보호 등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런 이주민들의 목소리에 화답하는 한국인들도 함께 집회에 참가해 연대와 우애를 다지자.

2011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대회

일시: 2011년 12월 18일 (일) 오후 2시
장소: 서울 보신각

희망버스 평가와 진로 논쟁

엔진이 식기 전에 새로운 시동을 걸자

지난 6개월간 한국 사회를 흔든 희망버스가 마침내 조남호를 무릎 꿇리자, 희망버스의 다음 스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크레인에서 내려오자마자 “희망버스의 연대 행동이 쌍용차로 향해 죽음의 행렬을 끝내야 한다”고 했고, 〈한겨레〉와 〈경향〉 등 언론들도 이 방향을 제안했다. 심지어 검찰도 송경동·정진우 동지를 두고 “내보내 주면 다시 희망버스를 타고 쌍용차로 갈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동안 온 열정을 바쳐 연대 투쟁을 이끌어 온 희망버스 기획단은 타이밍을 잡으며 발빠르게 새로운 출발에 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희망버스가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거대한 운동이었단데 여러 투쟁 작업장 노동자들이 연대를 바란다는 점에서, 어느 한 방향을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희망버스는 그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에 부딪혔다. 그때마다 기획단은 운동의 지속·확대를 위해 비교적 재빠르게 올바른 방향으로 대중을 이끌었고, 많은 이들이 우리의 호소에 응답했다. 이런 민주적 리더십은 희망버스 운동의 원동력이었다.

민주적 리더십

그 점에서, 기획단의 일부에서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끄는 것은 아쉽다. 이것은 의도치 않게 1차 승리로 고무된 사람들의 열기를 누그러뜨리는 구실을 할 수도 있다.

일부 동지들은 협상이 만족스럽지 못해 “70퍼센트 따낼 것을 40퍼센트 밖에 따내지 못했다”고도 하고, 최종 타결 내용이 ‘정리하고 철회’가 아니라며 의미를 깎아내린다.

그러나 희망버스는 노동자들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해 10~20퍼센트도 따내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전국적 연대를 건설해 꽤나 많은 성과를 냈다. 희망버스가 만들어 낸 사회적 압력 덕분에 국회 권고안조차 가능했던 것이고, 중국엔 이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뒀다.

따라서 희망버스가 거둔 성과는 앞으로도 이어가야 할 우리의 자산이다.

우리가 이런 성과를 디딤돌 삼아 또 다른 희망을 만들려면, 다시 한번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초점을 제 공해야 한다.

일부 동지들은 “자발적으로 여기저기서 희망버스를 출발시키자”고도 말

하지만, 이것은 중심을 흐트러뜨린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희망버스가 위력적이었던 것은 그동안 흩어져 싸우던 사람들을 한곳으로 집결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국적 초점을 형성하며 지배자들을 압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초점

지금 많은 사람들은 쌍용차로 핸들을 돌리자고 말한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송경동 시인이, 그리고 많은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우리에게 그 길을 향하자고 했다.

쌍용차 노동자·가족 19명의 연쇄 죽음은 우리 사회 정리해고의 상징이요, 경제 위기 고통전가의 상징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의 첫 희생양이 됐다. 그리고 다시금 경제가 더 깊은 위기로 빠져들고 있는 지금, 다시 쌍용차에서 연대 투쟁을 시작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은 의미심장하다.

따라서 ‘특정 작업장을 메뚜기처럼 뛰어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도 ‘쌍용차로 가자’는 제안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없다.

희망버스 기획단과 전국 회의는 이 방향으로 힘을 모으고 출발을 알려야 한다. 이미 대중의 목소리는 쌍용차로 가자는 것이다. 기획단은 이런 여론을 대변해야 한다.

일부 동지들은 “기획단이나 전국 회의는 결정권이 없다”고도 말하지만, 기획단은 이미 수많은 결정을 내리고 방향을 제시했다. **앞장서 운동을 이끌고 조직하는 이들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진정으로 민주적인 방식이다.**

오히려 모두의 의견을 다 들을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 무책임한 얘기다.

게다가 한진중공업에서 거둔 승리의 기운이 사람들을 고무했을 때 즉시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것도 아쉽다.

물론, 희망버스 조직자들의 어깨는 실로 무겁다. 이 운동이 거둔 성과가 큰 만큼, 다음에도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좋은 출발선에 서 있다. 우리에게 그간 쌓아 놓은 네트워크와 신뢰와 지지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1퍼센트만 대변하는 정부·여당의 한미FTA 날치기 처리로 분노하며 ‘명박 퇴진’을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다.

따라서 희망버스는 더 늦기 전에 새로운 힘찬 출발을 알려야 한다.

조명지



10월 8일 5차 희망버스에 참가한 사람들 이런 연대와 투쟁으로 일궈낸 한진중공업에서의 성과를 쌍용차로 이어 죽음의 행렬을 끝내자

송경동·정진우를 석방하라!

희망버스의 맨 앞에서 온 송경동 시인과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직장이 구속됐다.

이번 구속은 희망버스의 승리로 자존심을 구긴 이명박 정부의 비열한 보복이자, 희망버스에 함께해 온 모든 이들에 대한 공격이다. 박노자 교수의 말처럼 “희망버스 쪽을 이길 수 없고 복직투쟁에서 여지없이 패배를 당한 지배자들이[], 결국 구속이라는 이름의 노골적인 폭력에 호소”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송경동·정진우 방어 캠페인은 단 며칠 사이에 폭발적인 지지를 끌어내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진보신당, 문화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이 조직한 석방 탄원서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다함께가 한미FTA 반대 집회에서 받은 탄원 서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참가했다. 이렇게 모인 탄원서가 5천 장이나 된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교수와 알렉스 캘리니코스를 비롯한 국제 활동가 32명도 석방 탄원 서명에 동참했다. 송경동 시인의 동료 문인들은 각자의 책에 탄원 서명을 써서 재판부에 보냈고, 각계 인사들의 언론 기고·신문 광고도 매일같이 쏟아졌다.

지금 이 두 동지는 검찰 조사에 묵비로 저항하면서 운동의 대의를 지키고 있다.

검찰은 “내보내 주면 다시 희망 버스를 타고 쌍용차로 갈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구속했지만, 이들은 감옥에서도 지치지 않고 투쟁을 호소하고 있다. 두 동지의 변호를 맡은 조영선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두 사람에 대한 방어 캠페인과 희망버스 운동의 새로운 출발은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사람을 가장 잘 방어하는 길입니다.”

소은하

송경동 시인 인터뷰

“쌍용차의 아픔에 연대합시다”

송경동 시인이 구속된 지 11일째 되던 11월 28일, 부산 구치소에 수감된 그를 면회했다. 송경동 시인은 지난 몇 년간 “평택 대추리 어르신들 곁”에서, “기륭전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 곁”에서, “용산4가 다섯 분의 시인 곁”에서, 그리고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을 향해”서 거리의 시인으로 살아왔다. 그는 지금도 “희망버스가 ... 뜨거운 마음으로 연료를 채워 생생 달렸으면 좋겠다”고 한다.

“저들이 저를 가둔다고 해서, 제가 가뉘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의 투쟁과 연대가 저들을 포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이 나라 민주주의가 희생과 헌신을 통해 발전해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구속된 것도 그 과정이라는 점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희망버스에서 외쳤던 구호

의 의미처럼, 끝까지 웃으면서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쌍용차는 어느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아픔과 상처가 됐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회적 죽음들에 대한 위로와 연대가 필요합니다.

저들은 파업 당시 합의한 것조차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쌍용차 동지들이 빨리 일터, 삶터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인터뷰·정리 소은하

“죽음의 공장 쌍용차에도 희망의 씨앗을 뿌려 주세요”

고동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해고자

쌍용차 정리해고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 경제 위기 고통전가의 신호탄이자 노조 파괴 광풍의 시작이었다.

우리 쌍용차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전기가 끊기고, 물이 끊기고, 의약품이 끊기고, 인권마저 사라진 공장에서도, 용역 강패와 경찰 특공대의 폭력 속에서도 하나가 돼 77일간 목숨을 걸고 싸웠다. 쌍용차 투쟁이 패배해 노동운동에 미친 악영향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노동자들이 단결해 저항했을 때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 보여 줬고 이후 투쟁의 거름 구실을

했다고 생각한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단순히 생계가 어렵거나 마음이 굳건하지 못해 연이어 죽고 있는 게 아니다. 정리해고와 77일간의 투쟁을 말하지 않고서는 쌍용차에 담긴 죽음의 행렬을 이해할 수 없다.

첫째 죽음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닥쳐 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말 소리도 없이 한꺼번에 밀려났다.

연이어 사측이 노골적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정리해고 명단이 유명처럼 떠돌아 다녔다.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둘째 죽음이 뒤이었다.

셋째 죽음은 관제데모에 끌려 나온 이른바 ‘산 자’의 죽음이었다. 자본에 의해

갈라진 ‘산 자’와 ‘죽은 자’는 뼈아픈 상처를 감당해야 했다.

넷째로는 ‘희망퇴직’이라는 허울 속에서 절망해 생목숨을 끊은 이였다. 그렇게 귀한 목숨이 쓰러져 갔다.

시퍼런 분노

다섯째 죽음은 바로 이런 노동자들의 가족이었다. 죽음이 주는 슬픔과 고통에 차이가 있겠냐 마는, 가족을 위해 공장에서 함께 싸웠던 노동자들의 가슴에 맺힌 슬픔과 시퍼런 분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벌써 노동자·가족 19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런 우리에게 희망버스와 한진중공업 투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다. 한진중공업 투쟁이 승리해야 우리도, 다른 노동자들도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 투쟁보다 한진 투쟁에 관해 많은 얘기를 했다.

고맙게도 김진숙 동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희망버스가 이제 쌍용차로 가자’고 얘기한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투쟁하는 다른 동지들도 떠오른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쌍용차에 대한 희망버스의 연대는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심리치유센터 ‘와락’이 많은 분들의 도움과 힘으로 만들어졌고, 후원도 이어지는 걸 보면 그렇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사람이 계속 죽고 있다는 것이다. 위로만으로는 죽음을 멈출 수가 없다. 투쟁과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공장 바깥으로 쫓겨난 노동자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쌍용차지부는 12월 중에 “쌍용차를 점령하라”는 이름의 텐트 노숙 투쟁을 시작한다. 역울한 죽음이 계속돼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함께 연대해 주길 부탁한다.

희망버스 탑승객들에게 제안하고 싶다. 12월 23일(금)~24일(토), 죽음을 생산하는 쌍용차 공장을 포위해 희망의 씨앗을 함께 만들자.

긴축에 맞선 전 유럽 노동자들의 투쟁

이탈리아의 국제 금리가 한계치인 7퍼센트를 넘고, 프랑스의 신용등급 하락 경고가 나오고, 유럽·미국 주요 은행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로존이 붕괴하고 전 세계 공황을 촉발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유럽의 위기는 국가 부채 위기, 금융 공황, 실물경제 침체가 서로 악순환하며 점차 심화하고 있다. 세계 지배자들은 독일이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 위기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독일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유럽 경제 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데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야 하는 것에 못마땅해 하고 있다. 중국은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거품 붕괴 위험, 수출 감소로 인한 기업 도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

국도 금융·재정 위기와 실물경제 침체로 위기이다. 이처럼 각각 제 코가 석 자인 상황이라서 유럽 경제 위기를 막는 데 협력하겠다는 말은 많지만 실질적인 개입은 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지배자들의 갈등과 무능력으로 위기는 점차 심화하고 있지만,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내민 정책의 강화가 실물경제를 침체시키고 다시 재장·금융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지만, 지배자들에게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에서 확대되는 노동자 투쟁과 미국에서 심화하고 있는 ‘점거하라’ 운동이 우리에게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 주고 있다.

파노스 가르가나스 그리스인 자본주의 주권자(노동자 연대 편집자)

이번 주는 전 유럽 노동자들에게 특별한 한 주가 될 것이다. 11월 30일 수요일 영국에서는 노동자 2백50만 명이 1926년 총파업 이후 영국 역사상 가장 큰 파업을 벌일 것이다. 그 다음 날에는 그리스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일 것이다. 이날 총파업은 은행가 출신 총리 루카스 파파데모스가 이끄는 새로운 연립 정부에 맞서는 첫 투쟁이 될 것이다. 이 두 투쟁들은 서로 연결돼 있다. 첫째,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희생시켜 부자들을 구제하려는 잔인한 긴축 정책의 공격을 받고 있다. 최근 의회에 제출된 그리스 2012년 예산안에는 실업자 수당을 26퍼센트나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 2년 동안 그리스에서 실업자가 50퍼센트나 늘었는데 말이다. 그리스와 영국 정부 사이의 조세 협정 덕분에 그리스 선박 소유주들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들은 세계적 부호들이며, 상당수가 런던 시티 [금융 중심가]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그들은 내년에 1천2백만 유로의 세금을 낼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 이주 노동자들은 노동 하가를 얻기 위해 5천만 유로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유럽 지배자들은 서로 손을 잡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새로운 반노조법을 가지

고 파업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주 그리스에서는 전력 노조 위원장 니코스 포토폴로스와 조합원 16명이 체포돼 재판을 받았다. 그들은 전력회사 DEEH가 사용료를 내지 못하는 빈민들에게 전력 공급을 중단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회사를 점거했다. 그리스 민중은 새로운 세대에 고통받고 있다. 그들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전력이 자동으로 끊긴다. 유럽 노동자들이 투쟁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 노동자들에게는 특히 중요하다. 정부는 전 유럽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그리스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리스처럼 작은 나라가 어떻게 독일이나 프랑스를 당할 수 있겠냐’고 말하면서 노동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 한다. 우리의 답은 명확하다. 우리가 이 문제를 보는 기준은 국가가 아니라 계급이다. 모든 유럽 노동자들은 손을 잡고 우리를 공격하는 동일한 은행가, 시장과 정부 들에 맞서 싸우고 있다. 우리 노동자들은 함께 싸울 때 더 강하다. 이번 주 런던과 아테네의 거리에서 이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권자(소셜리스트 워커) 2290호 번역 김용욱

영국 85년 만에 2백만 명이 역사적 파업을 벌이다!

11월 30일 영국 노동자들은 보수당 정부의 연금 공격에 맞서 파업을 벌인다. 이것은 1980년대 이후 참예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노동계급 저항의 시대를 열어 갈 기회가 될 것이다. 조합원들은 압도적 표차로 파업안을 통과시켰다. 전국적으로 2백만 명이 파업을 벌이고 수십만 명이 시위를 벌일 것이다. 이번 파업은 다양한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계기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전문직 노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행진할 것이다. 흑인 노동자, 백인 노동자, 아시아계 노동자들이 함께 싸울 것이다. 이것은 보수당 정부의 다문화주의 공격에 맞선 뚝배기 승리가 될 것이다. 또, 이날 파업에는 보수당의 공격을 받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할 것이다. 학생, 연금 생활자, 민간 부문 노동자와 ‘점거하라’ 운동 활동가들이 파업 파커팅에 합류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행진할 것이다. 영국 파업은 전 세계를 휩쓰는 반란 물결의 일부다. ‘아랍의 봄’, 그리스, 프랑스, 포르투갈과 스페인 총파업, ‘점거하라’ 운동의 성

장 등 2011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혁명과 반란이 일어났다. 이 투쟁들은 공동의 적—긴축, 신자유주의와 반란—에 맞서 싸우고 있다. 11월 30일 영국 파업이 촉발한 직접적 계기는 공공부문 연금 삭감이지만 동시에 이런 공동의 적에 맞서 싸우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11월 30일 파업은 앞으로 계속될 투쟁의 출발점이지 종결점이 아니다. 그러나 이날 파업이 종결점이 되기를 바라는 이도 있다. 노동당 지도자 에드 밀러랜드는 이번 파업을 지지하지 않았다. 영국 노동 일부 지도자들도 이번 파업을 통해 약간의 타협을 얻고 투쟁을 접고 싶어 한다. 그러나 대다수 기층 조합원들은 보수당에 맞서 싸워 이기고 싶어 한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과 일부 노조원들은 2012년 1월에 다시 총파업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월 총파업은 이번 파업에 참가하지 못한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들뿐 아니라 민간부문 노동자들도 파업에 참가시킬 기회가 될 것이다. 영국 파업의 승리는 전 세계 99퍼센트를 위한 승리가 될 것이다.



사진 출처: Tom Wain

11월 30일 행진하는 영국 공공부문 파업 참가자들 1980년대 이후 계속되던 노동운동의 참예기를 극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도약하는 미국의 계급 전쟁

엘마 데이비스

올해 9월은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3년이 되는 때이자 동시에 기업들의 탐욕에 맞선 국제적 운동인 ‘월가를 점거하라’ 운동이 탄생한 날이기도 했다. 9월 중순 활동가 1백50명이 월가에 위치한 사우스 주코터 공원을 점거하면서 시작된 운동은 이 공원의 이름을 ‘자유광장’으로 바꾸고 무기한 점거를 시작했다. 이 운동의 주요 구호인 ‘우리는 99퍼센트’는 전 세계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10월 15일 뉴욕 타임스 광장에서는 무려 10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이 운동은 아랍 세계를 뒤흔든 혁명, 특히 30년 동안 이집트를 장기 통치한 독재자 무바라크를 몰아내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한 타흐리르 광장 점거에서 영감을 얻었다. 청년 실직자(미국 실업률은 18.4퍼센트에 이른다)와 노동자들 다양한 사람들이 ‘점거하라’ 운동에 호응했다. 의미심장하게도 미국 최대 노총인 AFL-CIO가 10월 15일 시위를 지지했다. 많은 노동자가 이날 시위에 참가했다.

운수노조 위원장 제임스 러틀은 ‘점거하라’ 운동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행진 전의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월가를 점거하라”는 진정으로 기층에 기반을 둔 운동입니다. 우리는 사회·경제적 정의를 위해 싸우는 미국인들과 함께하게 돼 자랑스럽습니다. 금융 위기를 초래한 자들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만들시다.” ‘점거하라’ 운동은 오랫동안 기다려 온 반격의 시작일 수도 있다. 경제 위기가 발생한 뒤 3년 동안 진정한 좌파적 대안이 없는 미국의 상황은 암울해 보였다.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도 대중은 공황이 시작된 지 4년 뒤부터 반격하기 시작했다. 당시에 일단 반격이 시작됐을 때 투쟁의 강도는 대단했다.

1933~34년 미네애폴리스 지역의 텀퍼트 노동자들의 반란에서 샌



사진 출처: David Noveck

‘Occupy LA’ 시위대에 참가한 노동자들

프란시스코 총파업까지 급격한 투쟁들이 벌어졌다. 1934년에만 노동자 1백50만 명이 파업 2천 건에 참가했다. 현재 ‘점거하라’ 운동은 아직 그 정도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점거하라’ 운동의 탄생이 놀라운 도약인 것은 사실이다.

폭발적 분노

많은 미국인은 2008년 오바마가 당선하면서 진보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사뭇 달랐다.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실업이 크게 늘고 물가가 대폭 뛰었고, ‘오바마표 의료 개혁’은 무상의료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었다. 지난해를 오바마가 지지한 긴축안에는 앞으로 10년 동안 메디케어와 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 담고 있다. 우익 운동인 티파티가 성장하고 지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미국 좌파의 약점이 커다란 문제로 보였다.

그러나 2011년 공공부문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3주 동안 위스콘신 주 의회 건물을 점거한 것은 미국 노동조합 운동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노동자들은 공화당 상원의원 스킷 위커가 의료보험, 연금과 단체협약권을 공격한 것에 분노했다. 위스콘신 시위는 인디애나에서 오

클랜드까지 수많은 미국인의 분위

기를 대변했다. ‘점거하라’ 운동은 위스콘신 투쟁이 보여 준 폭발적 분노가 더 크게 확산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주류 언론은 ‘점거하라’ 운동이 방향이 없다고 보도하지만, 사실, 이 운동의 표적은 시종일관 명확했다. 운동 참가자들은 탐욕스러운 행위를 구제하면서 보통 사람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반복적으로 비난했다. 운동 참가자들이 든 팻말과 현수막에서는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식 등 다양한 요구들을 볼 수 있었다.

“월가를 점거하라” 운동의 ‘노동자 진출 그룹’은 ‘점거하라’ 운동과 투쟁 중인 작업장을 연결하는 작업을 벌였다.

‘월가를 점거하라’ 운동은 세계 경제 위기에 맞선 저항을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이 운동이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살아남으려면 운동의 폭을 계속 확장하면서 최대한 많은 노동계급 집단과 함께 싸워야 한다. 노동계급은 미국에서 99퍼센트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가운데 파관을 차지한다. 게다가, 노동계급은 집단적 산업 행동을 통해 1퍼센트의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권자(소셜리스트 리뷰) 2011년 12월호 번역 김용욱



사진 출처: Robert Johnson

11월 16일 캘리포니아 주정부 청사 앞의 ‘점거하라’ 시위대 폭발적 분노가 더 크게 확산되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인터뷰

자본주의 이후의 삶 — 미친 시장의 대안은 있는가?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하면서 갈수록 많은 사람이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들 대안을 찾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자본주의 이후의 삶’에 관해 말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국내 번역된 주요 저서로는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과 《변자본주의의 선안》, 《제국주의와 국제 정치경제》 등이 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분배할지를 시장이 결정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생산과 분배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시장이 자원을 분배하고 물건들의 가치를 매기는 방식은 문제가 많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사회의 생산자원이 극소수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1퍼센트가 대기업·은행·국가를 지배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더 많은 이유와 권력을 차지하려고 다툽니다. 생산과 분배의 우선순위는 이런 미친 경쟁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자원이 낭비됩니다. 예컨대, 현 경제 위기가 발생한 이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낭비됐는지 생각해 보죠. 자본주의 경쟁 과정은 가격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진정한 사물의 가치와는 상관없는 황당한 결과를 낳습니다. 해지핀드를 운영하는 사장 같은 쓸모 없는 인간들은 간호사와 교사처럼 꼭 필요한 사람들도 수백 배나 많은 보수를 받습니다. 또, 자본주의 가격 시스템은 이 체제가 초래한 환경 파괴와 같은 중요한 비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민주적 계획경제에서 자원의 분배와 사용에 관한 결정은 이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토론과 투표를 통해 내릴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는 한층의 ‘전문가’만이 아는 자연 법칙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에서는 집단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이 경제를 결정할 것입니다.

현재 경제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투표로 결정하기에는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요?

민주적 계획경제에서는 특정한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권력이 대대적으로 탈집중화돼야 합니다. 자본주의를 뒤엎는 혁명을 통해 그런 탈집중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이후의 삶에서는 최대한 많은 결정이 지역 수준 — 작업장, 주민위원회, 혹은 위원회에서 선출된 대표자 회의 등 — 에서 내려져야 합니다. 좀더 복잡하고 큰 결정을 내려려면 다른 방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원을 더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분배하려면 시, 주, 전국, 심지어 전 세계적 수준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주류 정치는 대다수 사람들이 수동적이고 중요한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전제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자기 일상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추구하면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입니다.

계획경제는 정말 비효율적일까요? 그래서 동유럽이 망한 것일까요?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도 이미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긴밀히 연관된 복잡한 경제 체제는 서로 협력하고 미래를 내다보려는 노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계획이 매우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계획은 경쟁하는 기업과 국가들이 정한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주의’라고 잘못 불린 동유럽과 소련은 이 문제를 잘 보여 줬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패배하면서 이 혁명을 만든 노동자협의회가 몰락했습니다. 당·국가가 권력을 독점하게 됐습니다. 이 새로운 지배계급은 서방 제국주의 열강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서방과 대적할 수 있는 무기를 생산하려고 중공업에 건설하는 데 자원을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련식 ‘계획’이었습니다. 국가의 손

에 권력이 엄청나게 집중됐습니다. 이 계획은 보통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군사 경쟁의 필요에 종속됐습니다.

따라서 소련의 사례는 민주적 계획이 불가능함을 보여 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오래전에 칼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것을 입증했습니다. 즉 사회주의는 국제적 수준에서만 건설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세계적 수준에서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한, 일시적으로 자본주의에서 떨어져 나온 사회주의 사회가 생기더라도 결국 자본주의의 경쟁과 축적 논리는 다시 강요될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구성물 중에서 새로운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용한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밑바닥부터 사회를 새로 건설해야 하나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인류의 생산력을 급격히 발달시켜 이른바 “문명화”하는 구실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본주의가 매우 착취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그 구실을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

다. 사회주의 혁명의 구실은 이런 생산력, 간단히 말해 여성과 남성의 능력을 자본주의의 족쇄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되찾아 집단적이고 민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는 자본주의가 성취한 생산력의 바탕 위에 건설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술을 가운데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릴 것입니다. 게다가, 자본주의를 틀 안에서 발전된 기구를 중에는 인간의 필요를 우선시 하라는 노동운동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들도 있습니다. 공공의료 제도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우리는 전국민의료보험제도(NHS)의 광범적 구조를 그대로 보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NHS에는 새로운 사회에서도 가치있을 만한 요소도 꽤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불평등을 낳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그것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주의 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야만 성공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남반구일 수도 있습니다. 21세기 투쟁의 최전두에서 있는 곳은 이집트와 볼리비아 같은 곳입니다.

오늘날 주류 정치는 대다수 사람들이 수동적이고 중요한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전제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자기 일상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추구하면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입니다. 계획경제는 정말 비효율적일까요? 그래서 동유럽이 망한 것일까요?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도 이미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긴밀히 연관된 복잡한 경제 체제는 서로 협력하고 미래를 내다보려는 노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계획이 매우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계획은 경쟁하는 기업과 국가들이 정한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주의’라고 잘못 불린 동유럽과 소련은 이 문제를 잘 보여 줬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패배하면서 이 혁명을 만든 노동자협의회가 몰락했습니다. 당·국가가 권력을 독점하게 됐습니다.

이 새로운 지배계급은 서방 제국주의 열강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서방과 대적할 수 있는 무기를 생산하려고 중공업을 건설하는 데 자원을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련식 ‘계획’이었습니다. 국가의 손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권자(소셜리스트 워커) 2290호 번역 김용욱

민주노동당과 참여당의 통합

노동계급의 단결이 아니라 분열을

김인식민주노동당 서울 지구위원장. 다함께 운영위원

11월 27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참여당)의 통합 안건이 통과됐다.

형식상 당대회라는 절차를 밟았지만, 실상은 당 지도부가 당의 최고의결기구인 당대회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이었다. 지난 8월과 9월 당대회에서 연거푸 부결된 민주노동당과 참여당의 통합 건을 지도부가 다시 올려 기어이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9월 25일 당대회 결정, 곧 참여당을 배제한 진보 통합을 추진하라는 결정을 지도부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642호)를 보면, “민주노동당은 9·25당대회 부결 뒤에도 진보대통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국민참여당, 통합연대 등 관련 정당·단체와 협의를 추진해 왔다.”

소수 지도자들이 당 위에 군림하며 당대회 결정을 가법게 무시한 것이다. 물론 그 전에도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민주주의의 모범은 아니었다. 당원들은 토론만 할 수 있을 뿐, 결정은 지도부가 혼자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당대회가 적어도 기층의 의사를 최소한이나마 반영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당 지도자들이 9월 25일 당대회 결정을 두 달 만에 대놓고 반복했다. 당대회를 소수 지도자들의 거수기로 삼은 것이다. 지도부가 자신들의 입장에 반하는 당대회 결정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포한 셈이다.

절차만이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참여당과 통합을 추진하면서 강령과 당헌을 후회시켰다.

이미 6월 정기 당대회에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제한”을 삭제하는 등 좌파 사회민주주의 강령을 그보다 온건한 강령으로 대체했다. 이번에는 참여당 측의 반대로 자신들이 금과옥조처럼 말하던 5·31 합의문에도 못 미치는 강령으로 합의했다. 당의 정치적 지향을 밝히는 강령 전문이 없고, 5·31 합의문에서 맨 앞에 배치돼 있던 노동 분야는 한참 후순위로 밀려났다.

게다가 민주노동당의 노동조합 기반을 상징하는 노동 부문 할당제가 당헌에서 빠졌다.(강령과 당헌의 후회는 <레프트21> 온라인 기사 ‘3차 통합 정당의 강령과 당헌 — 진보의 원칙과 가치가 삭감되다’를 참조하시오. <http://www.left21.com/article/10496>)

“자본주의 패배 극복” 같은 강령의 급진적 요소와 계급 정당의 연호를 부담스러워 한 참여당 측의 견해를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전격 수용한 것이다.

정치적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당대회

이 통합은 대의원들한테 정치적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민주노동당 당권파 지지자들은 당대회장에서 사전 결의대회까지 치르면서 대의원들을 동원하려 했지만, 대의원 참석자 수는 9월 25일 당대회 때보다 크게 줄었다. 9월 25일 당대회에는 7백87명이 참석한 반면, 11월 27일 당대회에는 6백27명이 참석했다. 1백60명이나 줄었다!

민주노동당 내부에서조차 이런 통합 과정에 대한 실망과 반감, 환멸이 만연한 모습을 방출한다.

그래서 “압도적 가결”이니 “높은 일치



11월 27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참여당 통합 반대 캠페인을 벌이는 당원들. 당대회를 거수기로 삼는 당 지도부에 대한 환멸·반감·실망 분위기 속에서 분열하고 곳곳하게 반대 목소리를 보여 준 반대파

성”이니 하는 평가를 내리며 회회낙락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

당대회를 소수 지도자들의 거수기로 삼은 것이다. 지도부가 자신들의 입장에 반하는 당대회 결정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포한 셈이다.

이제 6월 정기 당대회에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제한”을 삭제하는 등 좌파 사회민주주의의 강령을 그보다 온건한 강령으로 대체했다. 이번에는 참여당 측의 반대로 자신들이 금과옥조처럼 말하던 5·31 합의문에도 못 미치는 강령으로 합의했다. 당의 정치적 지향을 밝히는 강령 전문이 없고, 5·31 합의문에서 맨 앞에 배치돼 있던 노동 분야는 한참 후순위로 밀려났다.

게다가 민주노동당의 노동조합 기반을 상징하는 노동 부문 할당제가 당헌에서 빠졌다.(강령과 당헌의 후회는 <레프트21> 온라인 기사 ‘3차 통합 정당의 강령과 당헌 — 진보의 원칙과 가치가 삭감되다’를 참조하시오. <http://www.left21.com/article/10496>)

“자본주의 패배 극복” 같은 강령의 급진적 요소와 계급 정당의 연호를 부담스러워 한 참여당 측의 견해를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전격 수용한 것이다.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 온 금속노조 활동가들. 이런 목소리는 향후 벌어질 당내 논쟁에서 그 울바름이 입증될 것이다.

감을 떨어 주려고 사용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계급적·정치적으로 이질적인 참여당과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기층으로 갈수록 이런 이질성이 날을 불일치와 갈등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투총 울산시당 중앙대위원이 당 개시만에 올린 글은 참여당과의 통합을 마지못해 찬성한 기층 당 활동가의 심정을 잘 보여 준다.

“저 또한 두렵습니다! 보듬어 지켜야 할 가치와 신념은 내용명이쳐지고, 피와 살 같은 동지들이 사분오열하진 않을지...”

“운동가의 패기와 순수는 온데간데없고, 충성의 유물리와 함수관계에만 매몰되진 않을지...”

“모든 것을 걸고 당에 복무하던 동지들을 수만의 자유주의 세력들과 맞바꿀 수 없습디다. 그들이 필요해서 찬성표를 들었던 건 분명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제가 사는 지역에서 저와

당을 지지하던 우호적 대중들이 이명박 집권4년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낀다며 저에게 하는 말! (명평이라 봐도 무방할 듯) ‘제발 힘을 키워라! 그래서 한나라 집권만은 막아달라!’였습니다.”

참여당과라도 통합해서 어떻게든 진보정당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 하는 당원들의 바람과, 참여당 최고위원 천호선의 다음 발언은 정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분열의 씨앗

“87년 체제” 이후에 분열됐던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들을 통합해내는 것들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보며!” “그렇게 될 때 갖는 의미는, 민주당을 혁신시킬 수 있는 힘을 좀 더 가질 수 있고 진보를 혁신시킬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대통합정당이 이르면 2013년에도 창당이 가능하디.”

천호선은 이번 3차 통합을 민주당과의

야권 통합으로 가는 디딤돌로 삼으려는 반면, 다수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어떻게든 진보정당의 힘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 ‘참여당과라도’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정반대 방향을 향하는 두 견해에 대해 대응 얼버무리거나(이정희 대표:는 “총선 때까지는 이대로 갈 것이라는 유시민 대표의 말을 믿는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 참여당을 견인할 수 있다는 허세를 부렸다. 그러나 이번 통합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강령과 당헌 등에서 참여당의 요구에 끌려갔을 뿐이다.

무엇보다, 상이한 계급 기반을 가진 정당들의 통합에서 갈등과 분열은 피할 수 없다. “3차가 합당하는 것은 노동자와 중산층의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정치적 선택”(최장집)이기보다는 상이한 계급적 기반에서 비롯한 상이한 정치 방침 때문에 수시로 갈등이 표면화될 공산이 크다.

통합 정당은 진보정당이 아닌가?

일각에서는 참여당이 포함된 새 통합정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므로 민주노동당이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의 계급적 성격을 규정하려면 이데올로기뿐 아니라 실천을 봐야 하고 무엇보다 계급적 기반을 봐야 한다.

물론, 통합당의 강령은 2000년 창당 당시 민주노동당 강령뿐 아니라 6월 당대회에서 전면 교체된 강령에 비해서도 후퇴했다. 그렇다고 민주당처럼 시장경제 구축을 표방하지는 않는다. 요컨대, 좌파 사회민주주의의 강령에서 급진적 요소가 적잖이 삭감된 다소 온건한 사회민주주의의 강령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실천에서는 인민전선 전략 때문에 계

급투쟁을 제약하는 구실을 하곤 하지만, 최근 한미 FTA 폐기 투쟁에서 보듯이 여전히 반산자유주의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계급적 기반

재정과 인력을 총원하는 당의 계급적 기반을 놓고 보면, 노동조합 상근간부층의 기반이 과거에 비해 약화됐지만 그 기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당 기구가 과거에 비해 더 중간계급에 의해 통제받고 있지만, 당원들도 여전히 노동계급 구성이 다수다. 투표 기반도 압도적으로 노동계급이다.

요컨대 통합 정당은 사회민주주의의 정당들과 자유주의 세력이 연합한 인민전선이면서 여전히 사회민주주의 정당 구

실을 할 것이다.

상이한 계급에 기반한 세력들이 정당 형태로 만든 이런 인민전선에서는 당연히 모순과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현재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인민전선 전략에 근거해 특히 계급투쟁에 직면하면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대중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 집권 여당이 아닌 야당인데다, 스탈린주의자들이 그 내부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계급투쟁 상황에 따라 지그재그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좌파는 이런 모순과 통요를 이용해 개입할 줄 알아야 한다.

잉태할 통합



참여당 통합 찬성표를 들고 있는 이정희 대표. 9월 당대회 때 민주노동 김영춘 위원장이 앉아있던 이정희 대표의 옆자리가 11월 당대회 때는 비어 있다. 민주노동 위원장과 창당대표마저 불참한 모습은 이 당대회의 오점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반대파는 무엇을 할 것인가

9월 25일 당대회는 그 결과를 누구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전투였다. 반면, 11월 27일 당대회는 누구나 반대파의 패배를 예측했다.

이기는 싸움만 할 수 있다면 그전만큼 좋은 일이 없겠지만, 때로는 패배를 각오하고 투쟁해야 할 때도 있다. 이번 투쟁이 그랬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패배가 예상되는 이 투쟁에 참가했는가?

먼저, 당권파들은 압도적 가결을 원했다. 반대는 소수의 목소리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 줬지만 패배를 설욕하고자 했다. 따라서 당대회 보이콧이 당내 세력 균형상 성공 가망성이 없었다면 참가해 반대 규모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당권파의 우경 행보를 견제하는 데 더 효과적 전술이었다.

둘째, 이번 당대회가 상황 종료를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여당과의 통합은 또 다른 분란과 분열을 잉태할 것이다. 계급적 기반이 상이한 두 정당의 통합에 내재한 운명이다. 현재의 통합은 불

안정한 3자 동거 체제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당대회는 종착역이 아니라 또 다른 전투를 향해 가는 과정이었다. 그렇다면 이번 전투에는 패배하더라도 반대파가 더 확실하게 결속을 다져 다음 전투를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반대파의 결집이 부족했던 것은 아쉽다. 이 대목에서 필자가 반대파의 당대회 참가 동기 부여를 이번 전투의 핵심 전술로 분명하고 일관되게 제시하지 못한 것을 자성적으로 평가한다.

때와 조건

앞으로도 반대파에게는 중대한 과제가 있다. 현재, 참여당과의 통합을 반대했던 일부 당원들은 민주노동당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물론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 개별적으로 민주노동당을 탈당하는 것은 정치적 주목을 받지 못해 효과적 저항 수단이 못 된다. 그리 되면 새로운 정치 세력화의

전망을 제시할 수 없다.

지금부터 반대파는 통합 정당 내부에서 효과적으로 세력을 결집해야 한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3차 통합당의 미래는 매우 불확실하다. 앞으로 갖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표출될 긴장과 갈등 속에서 반대파는 좌파적 비전을 제시하고 당원들의 지지를 모아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개별적으로 탈당해 버리면, 반대파의 힘은 허공 속으로 증발돼 버릴 것이다. 반면, 반대파가 효과적으로 세력을 결집한다면 그것은 특정한 계급투쟁 상황과 정치 환경과 맞물려 진정한 좌파 정치 세력 결집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반대파는 통합 정당 내에서 별도의 세력화를 이뤄 3차 통합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의 더 중요한 전투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계급투쟁과 정치 상황의 변화를 봐 가며 참을성 있게 자체의 결집과 세력화를 이룰 것을 반대파 동지들에게 감히 호소한다.

서평: 《두 개의 미국》

‘월가를 점거하라’ 운동을 예견한 책



《두개의 미국》
조너선 낄 지음
문현아 옮김, 책값
1만 5천 원, 3백83쪽

미국 월가 ‘점거하라’ 운동을 통해 ‘99퍼센트의 저항’이 분출하면서 미국 사회의 본모습에 대한 관심이 높다. ‘테러와의 전쟁’에서의 후퇴, 워싱턴 캔센서스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파산 위기, 중동 혁명이 가져온 친미 정부들의 잇따른 붕괴는 21세기를 ‘미국의 세기부 규정하라 한 미국 지배자들이 꽤 명칭했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런 명칭이들과 초대형 무역협정을 맺고, 그 명칭한 시스템을 더 확실하게 한국사회에 이식하겠다는데 누군들 불안하지 않았는가. 경북대 사회학과 김광기 교수가 쓴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는 이런 불안을 등에 업고 근래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그 책은 미국 사회 어떤의 정경유착, 송자독식, 부패 등을 잘 폭로하고 있지만 미국인들을 길들여져서 ‘No’를 잊어버린 순종적인 존재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런 관점은 정의감에 가득한 미국인들이 월 스트리트를 점거한 현실과 맞지 않다.

탁월한 전망

따라서 미국의 본모습에 대한 분석과 탁월한 전망을 얻고자 한다면 조너선 낄의 《두 개의 미국》을 읽어야 한다. 이 책은 20세기 후반을 다룬 작은 미국 현대사라고 해도 좋을 만큼 엄밀한 정칙적으로 쓰여졌다.

저자는 사회적으로 발생이 급기시되는 두 단어가 미국 사회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핵심도구라고 주장한다. “미국인들은 대부분 미국이 부자들과 권력자들에 의해 굴러간다는 사실을 쓰러린 경험을 통해 터득한다. 그런데 이를 지배계급과 자본주의라고 표현하면, 구닥다리 골수 마르크스주의자로 물린다. 이런 식으로 급기가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진실을 직시할 수가 없다. 미국의 정책에만 분노할 뿐 지배계급을 비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모든 미국인을 탓하는 반미로 빠지고 만다.”

저자의 관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관점에 입각해 저자는 세계 자본주의의 위계질서에서 미국 지배자들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 나아가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1퍼센트로부터 99퍼센트의 대중을 분리해 내고, 그들의 독립적인 정치적 여정을 그려 낸다.

특히 세계화를 다룬 7장은 1973년 경제 침체가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평범한 미국인들과 제3세계 대중의 삶을 어떻게 궁지로 몰아넣어 가는지를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한미FTA가 바라는 한국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면 7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한국어판 후기(2008년 미 대선 무렵에서 밝힌 저자의 예측은 지금 조금씩 들어맞고 있다. “오바마를 지지했던 활동가들이 사기질에 할 것인지, 아니면 그를 넘어서고 결국 그를 비판하게 될 것인지 ... 나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 세계경제가 불안정하고, 세계의 권력균형도 불안정하며, 신자유주의 사상의 정치적 지배력 역시 불안정하다. ... 그 결과 1930년대와 1960년대에 그랬듯이 미국에서 거대한 대중운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에서 그런 규모의 운동이 벌어진다 그 메아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질 것이다.”

이동엽

중미 갈등은 계속 격화할 것인가

최근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순방 과정을 이 지역에서 미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했다. 표적은 중국이었다. 오바마는 중국을 배제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선언했고 중국을 겨냥해 호주에 해병대를 배치했고, 중국이 공개석상에서 논의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한 남중국해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 외교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중국 고위 관료들이 허를 찔렀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지배자들이 미국의 노골적 태도에 놀랐을 수는 있지만 허를 찔린 것은 아니다. 이번이 미국 정부가 아시아에서 중국 정부를 자극한 첫 사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오바마는 당선 직후부터 미국이 전통적인 아시아 태평양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태부터 센카쿠/다오위다오 갈등과 남중국해 긴장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의 중요한 지정학적 문제에 사사건건 개입하면서 중국을 자극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었다.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이라는 재앙을 최대한 잘 수습하면서 미국 제국주의의 위신을 보존하고,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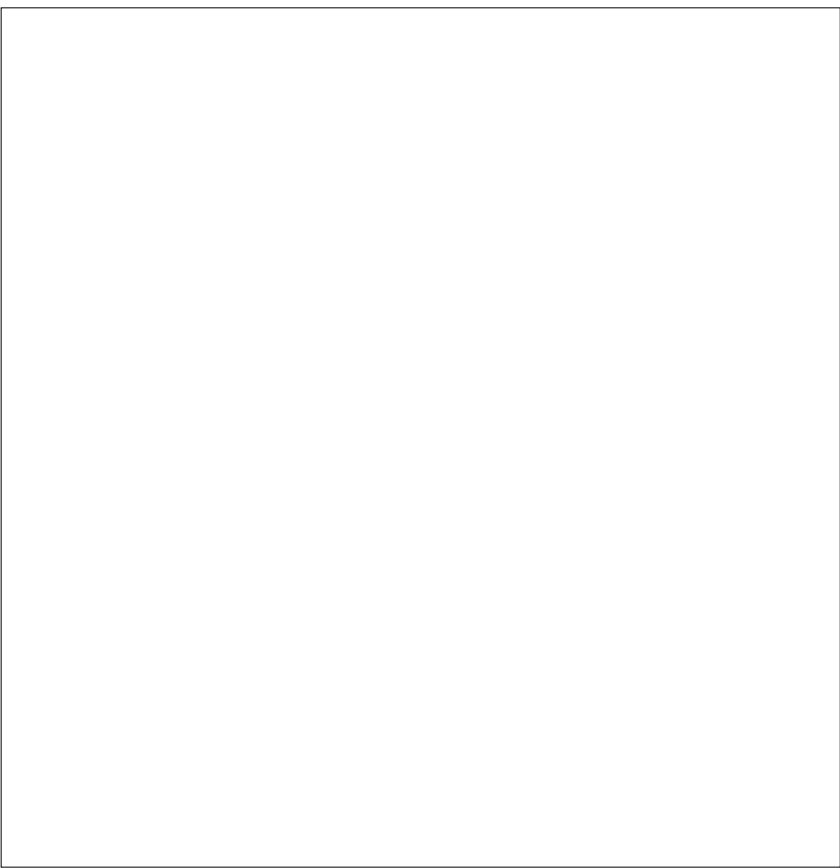
패권과 압박

결국 오바마는 두 전쟁을 ‘승리의 전쟁’으로 만들지도 못했고, 전투 병력의 대대적 철군 일정을 발표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동아시아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지배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예컨대 최근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의 태평양 세기’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계]정치의 미래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결정될 것이다. 미국은 그 결정 과정의 한가운데 있고자 한다.”

클린턴은 미국 제국주의가 이 지역에서 원하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아시아의 성장과 역동성을 이용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적 전략적 이익에 매우 중요하며 ... 개방된 아시아 시장은 미국에게 전례 없는 투자와 무역 기회와 첨단 기술에 접근할 기회를 줄 것이다.”

이것은 미국 제국주의가 지난 1백 년 이상 꾸준히 추구해 온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미국을 “문화개방 제국주의”라고 부르기도 했다. 동시에, 이것은 심각한 경제 위기와 실패한 전쟁에 직면한 미국 제국주의에게 더 절실한 과제기도 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것을 추구하는 데서 중국이 제일 중요한 고려임을 잘 알고 있



후진타오와 오바마 ‘상처입은 아수’ 미국은 중국을 자극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

다. 오늘날 중국을 빼면 클린턴이 말한 “역동적 아시아”란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클린턴은 이렇게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는 미국이 경험했던 양자 관계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중요한 관계다.”

클린턴은 미국 자본주의의 생명력을 되살리기 위해 중국에 바라는 것을 이렇게 말했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성장하는 시장에 수출할 기회를 공정하게 보

장받고 싶어 한다 ... 또, 중국에 투자된 5백억 달러의 자본이 [미국 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늘리는 데 필요한 새로운 시장과 투자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는 튼튼한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우리는 중국이 미국과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 국내 기업에 대한 특혜를 제거하고 외국 지적재산권을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상황을 종식

시키기를 바란다.

“또, 우리는 중국이 달러와 다른 주요 통상국 통화에 비해 자국 통화 가치를 좀 더 빨리 상승시키기를 요청한다.”

다시 말해, 오바마 정부는 미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위해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양보하길 바라는 것이다. 클린턴(과 오바마 정부)는 자신이 중국을 압박할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다. 그중 하나는 TPP와 같은 공세적 자유무역 정책이다. “우리의 희망은 높은 기준을 가진 TPP 협정이 미래 다른 협정들의 기준 구실을 하는 것이다. 또, 이것이 좀더 넓은 지역 내 상호협력, 그리고 더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를 창출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중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협정이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굴복에 바탕을 두고 중국을 포함하는 협정을 낳는 수단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TPP

과연 이 꿈은 이루어질까?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TPP 협상 당사자들 사이의 어려운 협상 과정은 돌째치고, 이미 미국보다는 중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과 긴축 정책에 몰입한 미국 경제를 묶으면 중국이 머리 숙이고 들어올 역동적 자유무역 블록이 형성될까?

미국 정부는 중국이 순순히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호주에 해병을 배치하고 남중국해 인근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타이 등 기존 군사 동맹을 유지·확대 제

편하는 것은 미국의 중국 압박이 단순히 통상 회담장에서 말싸움 수준에 머무르지 않을 것임을 보여 준다. 중미 관계가 경제적 경쟁과 군사적 경쟁이 서로를 약화시키는 악순환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물론, 클린턴이 훨씬 언급한 것처럼 중국 자본주의와 미국 자본주의의 밀접한 상호 관계를 감안하면, 이런 압박이 단기간에 군사적 충돌로까지 악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구나, 세계적 패권 세력으로서 미국 제국주의에게 여전히 중동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전략 지역이다. 중동 석유에 대한 통제권은 예나 지금이나 미국의 세계 전략의 중심축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미국은 이라크 철군 후 기세 등등해질 이란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놓고 고심해야 하는 처지다.

오바마 정부는 당장은 주변국들을 이용한 봉쇄로 이란을 다스리며 미국이 다른 곳에 개입할 여력을 벌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1백 퍼센트 통제하지 못하는 미친 개 이스라엘이라는 복병이 있다. 또한 중동에서 상처받은 미국 제국주의의 위신과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이란을 손봐 줘야 한다는 압력이 가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요한 점은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를 촉발시킨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미국 지배자들이 강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들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김용욱

미국 군비 부담 떠안으며 복지는 줄이는 “뺏속까지 친미” 정부

미국은 심각한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군비 약 5천억 달러를 삭감할 계획이다. 이는 세계 패권 약화를 만회하려고 군사력 강화에 의존해 온 미국이 처한 모순을 보여 준다.

그러나 오바마는 군비 삭감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력 약화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심화하는 중미 갈등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미국은 이 간극을 동맹국들에게 군비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오바마의 바람대로 방위비 분담금과 무기 수입,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등을 떠안으려 한다. 2008년에 이명박은 한국이 미군 기

지 이전 비용을 부담하는 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2019년까지 연장에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뺏속까지 친미”인 이명박은 이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비싼 무기

김종대 군사전문가는 <한겨레> 칼럼에서 “기획재정부는 미국제 무기 구입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국방예산을 재검토하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고 “사상 최대의 미국산 무기구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미국도 너무 비싸 사용을 포기하려는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 등을 포함해 내년엔 미국에서 직구매하는 무기 계약액이

14조 원에 이를 것이다. 운영 유지비를 포함해 무기 도입으로 말미암은 재정부담이 약 5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2012년 국방 예산을 보면, 1천3백억 원이 넘는 돈이 미국이 주도하는 MD 체제로의 편입을 가속화할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에 쓰일 예정이다.

사실 노무현 정부 때도 미국의 군비 부담을 떠안아 왔다.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 이전 비용의 절반만 부담했다고 말했지만, 얼마 전 위키리크스는 절반이 아닌 93퍼센트를 부담했다고 폭로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런 부담을 더한층 늘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한미 군사동맹 강화와 군비 증강은 중미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것

이고 군비 경쟁을 자극해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정이 고조될 것이다. 남북한 상호 포격 사태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런 위험하고 쓸 데 없는 일에 엄청난 돈을 쓰면서 99퍼센트를 위한 복지비는 삭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2년 예산에서 예산 삭감이 아동,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등 광범위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은 “보편적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천문학적인 국방비만 대폭 삭감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무기 도입과 군비 증강을 당장 중단하고 복지비를 확충하라!

김은영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토론회

이주노동자를 몰아내던 노조의 태도가 바뀐 이유

이정원 이주공동행동 기획위원

11월 30일 민주노총 주최로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와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지난봄 베트남 건설 이주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을 불법으로 몰아 탄압한 것에 맞서 여러 단체들이 함께 벌인 방어 운동의 교훈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이 자리에는 현재 건설노조 내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실천하고 고민하는 활동가들이 많이 참가해 보석 같은 얘기들을 들려줬다.

대구경북 건설지부 이길우 지부장은 “나는 2007년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몰아내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생각을 바꿔 이제는 부딪히더라도 조합원들을 설득해 이주노동자를 조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경북 지부의 경험은 의미심장하다. 2006년 파업 후 조합원들이 구속되고 건설 자본가들은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이주노동자들로 대체해 버렸다. 사기 저하돼 있던 조합원들에게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주범으로 보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대구경북 지부는 투쟁으로 ‘직접 고용’을 쟁취했고 세력 관계가 역전됐다. 이 상황에서 노조는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이주노동

자들의 조건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주노동자 조직화로 방향을 바꿨다. 이 사례는 노조가 추구하는 의식적 방향에 따라 이주노동자와 한국 노동자들이 반목하지 않고 단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의미 심장

토론회에는 이길우 지부장과 함께 현장을 돌며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조합원도 참가했다.

그는 “우리로 어디서 일하든 더 나은 임금, 조건을 바라고 노동권도 얻고 싶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노조에 참가하고 정치 활동하면 추방된다는 교육을

받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런 문제는 민주노총이 대책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길우 지부장은 “토론회 필요하지만 이주노동자들과 섞여서 함께 일해야 한다. 그래야 서로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조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중서부 지부는 대구경북 지부가 이주노동자를 적대하며 추방하려 할 때 가장 앞장서 비판해 왔다. 경기중서부 김태범 지부장은 대구경북 지부의 이런 변화가 너무나 고무적이라며 기뻐했다.

이런 변화는 건설 노조 내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확대할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건설노조가 이주노동자 문제에 부정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민주노총 어느 노조보다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 조합원”이 있는 것이다.

이런 조직화가 더욱 확대되기 위해서는 현신적 활동가에만 내맡겨 뒹선 안 된다. 건설 노조와 연맹이 이를 적극 지지하며 인적, 물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이 토론회에서 두 지부장은 사측의 노동강도 강화에 맞서 고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확충할 인원에는 이주노동자도 포함된다. 이것이 이주노동자를 현장에서 내모는 것보다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한국인 조합원들과 이주노동자들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

일본 대지진과 핵참사 이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재건에 맞서 투쟁할 것입니다”

이 글은 일본 노동 NGO인 포세(POSSE)와 다 함께가 진행한 노동자대회 맞이 토론회에서 포세 활동가 이와하시 마코토가 발표한 내용이다. 포세는 일본 청년들의 실직과 비정규직화 등에 맞서 활동하는 단체로, 수년 전부터 한국 노동자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올해 3월 11일에 발생한 일본 대지진과 이후 핵 참사로 말미암아 일본 동북부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지진과 쓰나미로 말미암은 사망·실종자는 약 2만 명에 이른다. 건물은 27만 호가량이나 파손됐다. 또 방사성 물질은 전국에서 검출되고 있다. 지금도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 반경 20킬로미터는 출입금지 구역이다.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매우 군색하다. 정부는 후쿠시마에서 지금도 연간 20밀리시버트의 피폭을 용인하고 있다. 또 식료품에도 국제 기준보다 훨씬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를 소유하고 있는 도쿄전력은 핵발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배상액을 낮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도쿄전력이 사고의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포세는 2009년부터 미야기 현 센다이시에 지부를 건설해 활동해 왔는데, 이곳도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센다이시는 동북지역에 있고 1백만 명이 사는데, 이곳 연안부는 모든 주택이 쓰나미에 쓸려 갔고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대피소에서 생활해야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8월에 모두 폐쇄되자 이재민들은 가설주택이나 ‘미나시 가설주택’(정부가 마련한 가설주택이 부족해 이재민이 직접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할 경우 지자체가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제도)에서 생활하고 있다.

당시 이들의 아주 끔찍했던 대피소 생



일본 대지진과 핵참사로 파괴된 미야기 현 센다이 시 신자유주의적 복구 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활은 매스컴을 통해 보도됐다. 이들은 학교 체육관에서 얇은 판자 한 장으로 나뉜 공간에서 사생활도 보호받지 못하고 생활해야 했다. 한편 대피소로 옮길 수조차 없었던 이재민들도 많았는데, 이들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정보도 받지 못한 채 수 개월 동안 무너진 집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이재민들

가설주택에 입주한 이재민들의 생활도 고통스럽긴 마찬가지다. 가설주택 입주자들은 임대료를 제외한 수도·전기·가스 요금 등을 전액 부담해야 하고 대피소에서는 무상으로 지원받았던 식량도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쓰나미나 지진으

로 집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다. 한 신문의사의 조사를 보면 이재민의 70퍼센트가 지진 이후 수입이 전혀 없거나 줄었다. 게다가 이런 가설주택조차 2년이 지나면 철거된다. 2년 후에 이재민들이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 분명한데도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 정부는 “창조적 재건”을 하겠다고 말한다. 재해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인데, 1995년 고베 대지진 때 처음으로 사용된 말이다. 당시 “창조적 재건”이라는 미명 아래 이재민들의 주택 재건이나 생활을 위한 복구는 뒷전으로 밀리고 공항 건설 등 기업들을 위한 시설 정비가 우선시됐다.

이번에도 정부는 다국적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우선하고 있다. 정부는 ‘재건 특구’를 설치해 기업 규제 완화, 세금 감면을 추진하고, 피해를 입은 어항(漁港)과 농지를 민간자본이 대규모로 소유할 수 있도록 투자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

한편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대책은 경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나 생활보호 같은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정부가 “자립”했다고 판단한 가설주택 입주자는 지금까지 받아 온 모든 지원이 중단된다.

이번 재해로 지금까지 일본에 존재하던 모순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다. 현재 재해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빈곤 문제는 일본 사회의 사회보장이 미비

한 데서 기인한다. 빈곤 문제가 대규모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생활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 주거권 확립이나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세가 센다이 시에서 벌이고 있는 복구 지원 활동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원 활동의 첫째 목적은 재해지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일본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문제라는 인식을 확대하고 이를 쟁점화하는 것이다.

둘째 목적은 “창조적 재건”이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저항하는 축을 형성하는 것이다. 지금이 일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기점이다. 재해로 사람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우리는 사람들의 생존이나, 아니면 정부와 다국적기업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활동이나 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재해 지역 주민들의 편에 선 지원 활동으로 신자유주의적인 복구 재건을 막고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할 것이다.

지진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이기도 하다. 일본 사회는 지금까지도 여러 문제들이 개인의 책임이라는 정서가 강하다.

그러나 이번 재해를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빈곤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다. 바로 이재민들이다. 그들의 빈곤은 단순히 지진 피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양산된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재민들의 문제를 시작으로 생활 보장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번역 최미선

1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막장 시나리오’로 달려가는 지배자들

김종환 연세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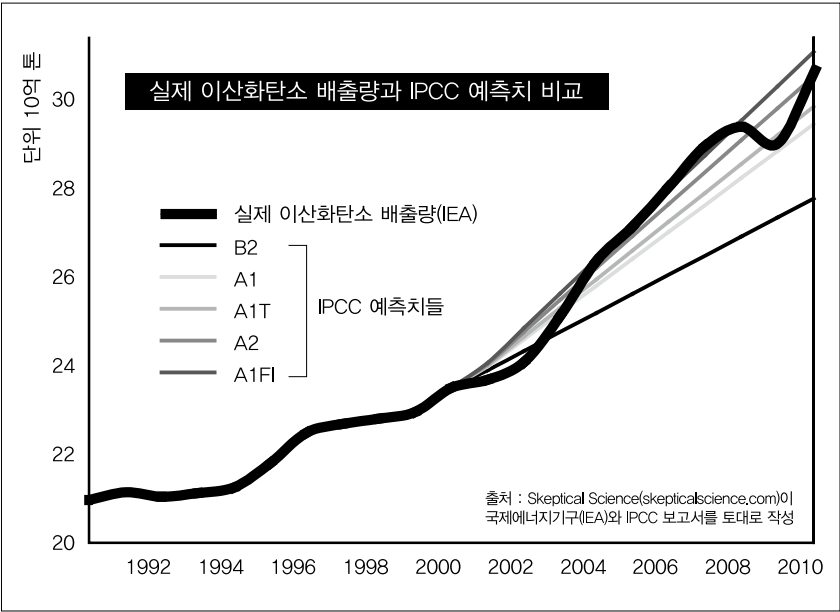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배출을 줄여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2007년에 노벨평화상을 받은 유엔 보고서에서, 과학자들은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과학자들은 모든 경우를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외면한 채 화석연료에 기대어 세계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온실가스는 엄청나게 배출되는 ‘막장 시나리오’도 그 중에 있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과학자들이 최악으로 여긴 그 시나리오보다도 더 빠르게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다.(그림 참조)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경제성장은 오히려 정체했는데도 말이다.

경제성장 속도가 떨어졌는데도 온실가스가 이처럼 빠르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재정 적자 때문에 각국 정부가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가능에너지에 보조금 지급을 줄였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빠르게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에서 발을 뺐다. 국내에서도 현대, LG, SK 등이 재생가능에너지 투자를 줄줄이 취소하거나 미루고 있다.

엮힌 데 댔친 격으로 석유 가격까지 오르자 자본가들은 다시금 석탄을 꺼내 쓰



기 시작했다. 석탄은 석유나 천연가스보다 가격은 싸지만 같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만들 때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산성비를 유발하고 인체에 치명적인 아황산가스와 기관지 질환을 일으키는 미세먼지도 가장 많이 배출한다(1980~1990년대에 석탄이 규제된 이유다). 비용 절감과 이윤 추구 논리가 경제는 살리지도 못하면서 지구와 사람만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 때문에, 12월 9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

에 기대를 거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번 총회는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한다.

이번 총회에서 각국 대표단은 내년에 끝나는 교토 협약의 후속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원래 교토 협약 후속계획은 2009년 코펜하겐에서 정하기로 했었는데 계속 미루다 여기까지 온 것이다.

교토 협약은 2012년까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1990년보다 평균 5퍼센트 낮추기로 한 협약이다. 5퍼센트는 기후변화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만 ‘일단 한번 해 보자’는 취지에서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교토 협약은 오늘날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두 나라는 규제하지 않는다. 바로 중국과 미국이다. 미국은 당시 배출량 1위였음에도 뻔뻔하게 교토 협약 비준을 거부했고, 중국은 1997년 당시에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배출량을 줄일 의무를 면제받았다. 교토 협약은 선진국들이 산업혁명을 주도하면서 지난 2백 년 동안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한 책임을 먼저 묻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교토 협약 후속 계획은 미국과 중국의 배출을 줄이도록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이를 원치 않기 때문에 교토 협약 체제를 ‘자발적 감축 노력’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교토 협약 체제에서는 1백94개 국이 함께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합의했는데 그것이 거추장스럽다는 것이다. 도둑놈 잡자고 모였더니 도둑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하고 말하는 형국이다.

중국과 미국

결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투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받

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개도국 대 선진국이라는 구도로 온실가스 문제를 보도한다. 그러나 이는 수박 겉핥기식 접근이다. 본질은 미국과 중국의 지배계급 1퍼센트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99퍼센트의 자국 민중과 나머지 국가들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올해 11월에 발표된 유엔 보고서를 보면 1970년부터 2008년까지 자연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95퍼센트가 개발도상국에 속했고, 그것도 개발도상국들 중 경제성장이 가장 빠른 나라들에서 그랬다. 따라서 기후변화 때문에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중국의 헐벗은 노동자와 농민들은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같은 보고서는 2005년을 자연 재해가 가장 컸던 해로 꼽았는데, 미국 남부에서 2천명에 가까운 빈민들이 수장되고 1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재민으로 전락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문이다.

기후 정의를 요구하는 활동가들은 12월 3일 국제적으로 대규모 ‘점거하라’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각국 대표들에게 맡겨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식으로 끝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후정의 활동가들이 1퍼센트에 맞선 99퍼센트 운동 건설에 힘을 쏟아야 하는 까닭이다.

현대·기아차 노조의 '공동 투쟁' 선언

변화 열망을 투쟁으로 이을 정치가 필요하다

현대·기아차 노조의 신입 집행부가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위한 “공동 교섭, 공동 투쟁”을 선언했다. 금속노조 차원의 ‘완성차 공동 투쟁 준비회’도 구성됐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보를 반가운 신호로 여기고 있다.

그동안 현대차·기아차 노조 집행부는 서로 힘을 합쳐 공동의 적에 맞서기보다, ‘누가 총대를 뿔 것인가’를 두고 눈치만 봐 왔다. 더구나 현대차 이경훈 집행부는 ‘기아차보다 더 파내겠다’는 주장을 펴며 노동자들 간 경쟁의식이나 부추겼다. 이는 노동자들의 의식을 뒤틀리게 만들고 부민주주의를 강화해 왔다.

이런 ‘실리 없는 실리주의’ 속에 노동자들은 물량 확보 등을 둘러싼 갈등을 반복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유성기업 투쟁, 한진중공업 투쟁 등에 연대하는 것도 주저했다.

물론, 이것은 IMF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공격 속에 노동조합 운동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다시 경제가 수렁에 빠지고 자동차 호황도 약발이 다해가는 상황에서, 상시적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이것이 투쟁과 위기 극복으로 이어질지는 노동운동의 대응이 좌우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완성차 신입 집행부들이 단결을 선언한 것은 완전히 옳바르다. 단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금속 노동자들

결 투쟁이야말로 노동자들의 계급의식과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한국 노동조합 운동의 원팔, 오른팔인 현대·기아차 노조가 강력한 단결 투쟁을 벌일 때, 심야노동·비정규직·일자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힘으로 1퍼센트 부자들에 맞선 99퍼센트의 행동을 확대·강화하며 사회적 연대로 나아가야 한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노동시간·비정규직 등에 대한 양보 제스처를 믿고 기다리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경제 위기 상황에선 강력한 저항 없

이 진정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완성차 노조들은 사측과의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기”에 미련을 뒤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부와 지배자들이 정치적 위기에서 허우적대며 사본오열하고 있는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말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최근 주요 노조들의 선거 결과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변화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줬다. 특히, 대표적인 우파 집행부가 줄줄이 낙선하고 보다 투쟁적인 좌파 집행부가 당선한 것은 눈여겨 볼만 하다.

비정규직 점거파업에 찬물을 끼얹고 투쟁을 회피해 온 현대차 이경훈의 패배는 정말 통쾌한 일이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은 바로 한 달 전에 “울산에서 노사평화가 정착됐다”며 좋아했는데, 이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한진중공업에선 조합원들의 등에 칼을 꽂은 채길용이 좌파 후보에게 대패했고, GM대우에서도 더 전투적인 후보가 당선됐다.

이경훈의 패배

물론, 그렇다고 현장 조합원들의 사기가 충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대차에서 문용문 후보는 3퍼센트를 조금 넘는 차이로 간신히 이경훈을 이겼다. 기아차에선 금속노조 탈퇴를 주장하

는 우파가 지난 선거보다 갑절 가량 지지를 늘렸다.

그간 현대차의 좌파 활동가들은 이경훈의 배신과 투쟁 회피에 효과적으로 맞서지 못했다. 예컨대, 대표적인 현장파인 ‘민투위’(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는 2009년 윤해모 집행부의 중도 사퇴와 주요 활동가들의 ‘골프’ 사건 연루 등으로 위기를 겪어 왔고, 이번에도 저조한 득표를 했다.

기아차에선 좌파 현장조직 ‘금속 노동자의 힘’ 소속 김성락 집행부가 노동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연임에 실패했다. 좌파 현장 조직과 활동가들이 작업장 밖으로 시야를 넓히며 현장 조합원들의 행동과 연대를 건설하지 못하다 보니, 우파가 그 틈을 비집고 나올 수 있었다.

새로 당선한 배재정 집행부는 자민통 진영의 선거 연합으로 당선했지만, 지난 선거에서 얻은 개별 후보들의 지지율의 합보다는 적은 표를 받았다. 선거 연합에 참가한 ‘기노회’(기아자동차 민주노동자회)가 전 간부의 비리를 감싸며 투쟁의 발목을 잡는 구실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요컨대, 좌파의 정치적 취약성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수년간 노동조합 운동은 정치적 약점과 부절적인 방향 때문에 위기를 겪었다. 때때로 투쟁 가능성이 솟구쳤다가 도 급세 꺼진 데에는 현장에서 정치적 주

장과 설득, 대안을 제시하며 조합원들의 행동을 건설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지금 많은 상층 지도자들은 투쟁보다는 내년 선거에 기대 어지간한 개혁을 따내는 게 낫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것은 운동의 압력 없이 부르주아지 개혁 분파에 기대서는 양보를 따내기 어렵다는 역사적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다.

반대로, 많은 경우에 노동조합 운동 내 전투적 활동가들은 이런 개혁주의에 반발해 일면적으로 전투성만 강조하기 일쑤다. 개혁주의 정치와 정당을 거부하고 현장 투쟁만 잘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주의의 영향력에 개입하면서 도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개혁주의가 강화된다.

예컨대, 진보정당과 참여당의 통합은 노동자들의 사기와 운동의 요구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참을성 있게 이런 문제에 개입해 진정한 진보의 단결과 투쟁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미FTA가 가져올 결과와 반대 투쟁의 정치적 의의를 설명하면서 거리의 청년·학생 투쟁에 노동자들이 함께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좌파 활동가들은 명확한 정치적 주장과 대안을 제시하며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투지를 높여 행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설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12월 12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주간연속2교대제

공지에 몰린 정부가 꺼낸 꺾데기를 알맹이로 만들자

정부가 ‘완성차의 장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발표하고, 자동차 업계에 거듭 노동시간 단축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은 2013년부터 주간2교대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현대차 사측에게 “더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한미FTA 반대 촛불 등 들끓는 반발과 분노에 밀린 이명박 정부는 개혁 시늉이라도 해서 노동자들을 달래고 투쟁 동참을 막아야 할 처지다. 그래서 심야노동 철폐, 노동시간 단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간연속2교대제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금속노조의 핵심 요구이기도 하다.

물론, 뻥속까지 ‘친재벌·반노동’인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들의 건강이나 고용

불안 등을 진지하게 걱정해서 이것을 추진할 리는 없다.

저들은 지금 주간연속2교대제를 누더기로 만들려고 한다. 2003년 도입된 주5일제가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고 장시간 노동도 해결하지 못해 빈껍데기가 됐듯이 말이다.

실제로 정부와 보수 언론은 “고임금 귀족노조”의 “장시간 노동 관행”이 문제라며 임금 삭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대차 사측은 이미 2009년부터 시행됐어야 할 주간연속2교대제를 2013년에야 실시하겠다고 한다. 더구나 노동강도와 노동유연성을 확대하고, 휴일도 줄이려 한다.

따라서 문제는 주간연속2교대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 것인가다.

그간 현대·기아차 노조 지도부 등은

임금과 노동강도는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해 왔다.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지난 20년간 투쟁으로 확보한 기득권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올해 이경훈 집행부가 추진한 노동강도 강화를 포함한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안은 조합원들의 반발로 진척되지 못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너도나도 잔업·특근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을 반길 리도 없다. 여론조사에서 현대차 조합원의 57퍼센트가 “급여가 일부 줄어도 교대제 개편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답했지만, 노동자들은 “설문조사 질문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임금을 줄여야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노동강도를 늘릴지 말지가 아니라, 얼마나 늘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따라서 문용문 집행부는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 삭감 없는 월급제를 고수하며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현대·기아차 신입 집행부가 공동투쟁을 선언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런 투쟁으로 온전한 주간연속2교대제를 쟁취해야 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활동가들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선동하며 현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부품사 노동자들의 단결을 구축해야 한다.

모승훈

유성기업

사측의 비열한 보복과 저항

‘밤에 잠 좀 자자’는 정당한 요구를 짓밟았던 유성기업 사측이 노동자들의 현장 복귀 후에도 탄압의 고삐를 죄고 있다.

사장 유시영은 27명을 해고하고 40명을 출근 금지시키고, 전체 조합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징직 징계를 받은 노동자들에게는 낙임 치우기, 잡초 제거 같은 일을 시키며 모욕을 주고 있다.

‘작업 중 잡담 말라, 조합 출입 말라, 화장실 자주 가지 말라’는 등 감시와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또, 끝까지 투쟁에 참가한 이들을 고립시키고 노동자들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용역강제의 폭력에 두개골을 다쳐 어지러워 걷지도 못하는 노동자에게 회사에 복귀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법원과 경찰은 유시영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에게는 ‘3D 촬영’ 채증까지 해 9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11월 23일에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주최로 아산공장 앞에서 결의대회가 열렸다. 사측의 방해를 뚫고 유성기업 조합원 50여 명이 ‘동지개’를 부르며 작업장에서 공장 앞까지 줄을 지어 행진했다.

한 노동자는 “노동조합의 숨통 자체를 끊어 버리려는 사측과의 싸움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린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김기선

세종호텔 노조

냉철한 평가에 기초해 투쟁을 강화해야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세종호텔 노조의 손을 들어 줬다. “사측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단체교섭을 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1회 당 2백만 원의 강제금을 부담하라”고 한 것이다.

이제 세종호텔 노조 지도부는 더 단호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레아만 지난 1년 동안 빼앗긴 조합원의 권익과 노동조건 후퇴를 만회할 수 있다.

사측은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공격에 나섰다. 노조 간부들을 탄압했고, 부서 강제 통폐합으로 일부 조합원들을 사실

상 내쫓아 버렸다. 또 친사측 노조 건설을 부추겼고, 대규모 부당정보를 강행했다.

세종노조 지도부는 홍보전 등을 진행하며 사측의 횡포에 맞섰다. 그러나 아쉽게도 실질적이고 단호하게 투쟁하는 것이 부족했다. 때로 투쟁을 주저하다가 사측의 공격을 허용하기도 했다.

예컨대, 사측이 프런트 여성 직원들에게 야간근무를 강요했을 때, 노조 핵심 간부가 투쟁 의지를 밝히는 조합원들을 자제시킨 것은 분명한 잘못이었다. 사실

상 강제로 퇴사한 직원들이 ‘고용안정협약’(통상 임금의 24개월치를 지급한다) 적용을 문의했는데, 이 문제에 침묵한 것도 문제였다.

이 과정에서 실망한 조합원들이 세종노조를 탈퇴하고 친사측 노조로 옮겨 갔을 것이다.

노조 지도부는 이런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진정성 있게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잘못된 자기 비판하고, 후퇴된 요구들은 되돌리고, 더 다양한 기층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그레아만 조합원들을 결

속시키고, 나아가 탈퇴한 조합원들도 다시금 끌어당길 수 있다.

노조는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하면서 저력을 보여 준 바 있다. 11월 13일에 열린 집회에는 조합원 60퍼센트가 참가했다.

법원조차 세종노조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투쟁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박성환

독자토론광장

12월 12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Letter@left21.com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소수자를 삭제한 세력이 우리의 동지인가?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에 다녀왔다. 성소수자 당원으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자 했지만 찬성 토론자와 숫자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것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가 집권 말기에 제출한 차별금지법안은 기독교 우파들의 호모포비아 공세에 그냥 밀려나고 말았다. 지금까지도 우파들은 ‘동성애차별금지법’ 만들면 온 나라가 동성애자 소굴이 된다고 떠들고 있지만, 당시 여권의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 관심을 없앴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까 봐 눈치를 봤다.

민주노동당은 소수파였지만 확고하게 성소수자의 편이었다.

지금,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도 여지없이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빼야 한다는 기독교 우파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우리 편이 돼 줄 거라고 생각했던 의원들은 저마다 생각이 다르다.

기독교 우파들이 학생인권조례 찬성하면 다음 선거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는 통에 부담스럽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당 이념의 문제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자신이 만들겠다는 통합정당이 이런 혼란과 눈치보기를 거듭하는 당의 정치인들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의 결정과 행동에 어떤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나는 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이 지



올해 6월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강령 후퇴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성소수자 당원들

난 10여 년간 소중하게 지켜 온 진성 당원제와 당내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생각에 몹시 참담하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원칙들이 지켜지는 한 나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동지들이 생기고, 소수의 의지대로 당을 좌락 좌락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소수자의 주장을 과감히 펼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좌락파락

이건 성소수자에게 정말 실질적인 문제다. 지금까지 진보정당들이 그 안에서 수많은 논쟁과 토론을 거쳐 만들어 온, ‘실질적으로’ 소수자를 존중하는 여러 제도들과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역사는 통합한다고 절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정권이 보여 준 소수자 관련 법안에 대한 미온적이고 무기력한 태도를 보건대 나는 국민참여당과 함께할 수 없으며,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옮길게 지키는 것이 성소수자에게도 도움 된다는 말을 하고 싶다.

2007년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소수

자를 간단히 삭제한 참여정부의 옛 관료들이 어떻게 성소수자의 동지가 될 수 있던 말인가?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그 문제에 대해 해명한 적 있던가? 이정희 대표는, 당 지도부는, 이 통합안을 찬성한 대의원 동지들은 그러한 것들이 한 번도 목구멍에 걸려보지 않았단 말인가?

성소수자 당원들은 이미 지난여름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강령을 당이 포기할 때 비슷한 주장을 했던 적이 있다. 소수자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눈치보기 때문에 누락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를 혐오하는 순간에조차 우리를 방어하고 맞서 싸울 이념을 가진 정당이 필요하다. 심지어 그 정당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혐오 어린 시선으로 보는 일부가 있을지라도 말이다.

국민참여당 통합안 승인을 알리는 환호 속에서 씁쓸함을 감출 길 없었지만, 앞으로 우리는 위와 같은 주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곽이경 민주노동당 성소수자 부문 대의원

자동차 부품회사 노동자의 편지 심야노동의 뼈저린 현실을 드러낸 기사

새벽 5시, 잠에서 깨어납니다. 세수를 하고 앉아 있다가, <레프트21> 68호를 꺼냅니다. 여러 기사를 읽다가 문득, ‘착취체제야말로 1급 발암물질이다’ 기사를 정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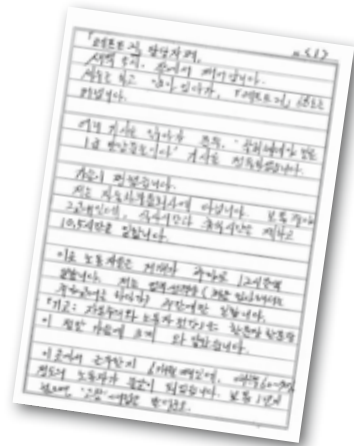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닙니다. 보통 주야2교대인데,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빼고 10.5시간을 일합니다. 이곳 노동자들은 거개가 주야로 12시간씩 일합니다. 저는 업무 성격상(처음 입사해서는 주야교대를 하다가) 주간에만 일합니다. 기사 한 문장 한 문장이 정말 가슴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한 지 6개월째인데, 노동자의 60~70퍼센트 정도가 물갈이 뛴습니다. 보통 1년이 넘으면 ‘고참’ 대접을 받더군요. 어느덧 이곳 작업장의 약 50퍼센트 정도가 중국동포로 채워졌습니다.

원래 이 회사(CY오도텍·E·T·R)는 6개월이면 비정규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임용했는데, 최근에는 사장이 결재를 미룬다고 하더군요. 정규직 사원은 지쳐서 그만두는 사람도 적지 않고요.

심야노동에 관한 이번 기사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정말 뼈저린 현실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본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내가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도,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현실이 끔찍합니다. 아니, 참혹합니다. 심야노동은 인간의 삶을, 생존을 근본에서부터 부정하는, 파괴하는 반생명적·반인간적 병폐(아편)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병들게 하는 이런 악마적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이 정말...

인간도 자연이라는 생명의 일부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 자본주의 기계 문명은 인간을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며,



인간의 삶을 깊이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갈아엎어야지요, 생명을 거스르고 생명에 역행하는 이윤의 논리를 뒤집어야지요. 정말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심야노동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악마적 시스템

싸워야 하는데 솔직히 막막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지금의 이 현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노동자들의 단결을 이끌어 내 싸운다는 것도 그리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분노를 삭이며 다짐합니다. 인간을 병들게 하는 사회, 인간의 생존을 부정하는 시스템이라면 그 어떤 질서라도 부정돼야 한다고.

이렇게 두서없는 글이나마 쓰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정리됩니다. 저는 앞으로 <레프트21>을 제 노동자 친구들에게 권할 생각입니다. 피부로 와 닿는 심야노동 같은 좋은 기사를 많이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0일 아침 7시 22분 김승기(기행)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한미FTA 반대 시위

울산

“노동자들이 앞장서자”

한미FTA반대울산운동본부(이하 울산운동본부)가 재가동되면서 10월 중순부터 한미FTA 저지 촛불집회가 시작됐다. 촛불집회에 2주 동안 거의 매일 70~8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대부분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다.

23일 집회에는 노동자와 시민 3백여 명이 참가해 “비준 무효, 이명박 퇴진, 한나라당 해체”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철 민주노총울산본부장은 “1996년 노동법·안기부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신한국당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처럼 이명박과 한나라당도 사라지게 합시다.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한미FTA를 반드시 무효화시키겠습니다” 하고 밝혔다.

촛불집회에는 중·고등학생들도 참가해 열기를 더하고 있다. 울산대학교 학생들도 열의있게 참가했다. 12월 3일에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집행부가 노동자들을 대거 조직할 계획이다.

울산운동본부는 정부가 퍼트리는 “자동차 산업과 울산 지역의 혜택”이라는 괴담에 맞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김기선

수원

“될 때까지 모이자, 모이면 이긴다”

‘수원촛불’은 2008년 촛불항쟁 때부터 매주 촛불 집회와 선전전을 진행해 온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 경찰의 방해와 탄압에도 촛불은 계속됐고 2008년부터 한미FTA의 문제점도 꾸준히 다뤄 왔다.

한나라당의 한미FTA 날치기가 임박하자 시민들의 참가 열기가 높아졌고, 그 결과 다양한 활동들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11월 2일부터 국회 외통위 위원장 남경필(수원 팔달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20일이 넘게 매일 촛불집회를 열고 수원 팔달문 일대를 행진했다. 특히 11월 2일 촛불 집회에는 시민 1백여 명이 모였고, ‘쌍코’ 등 촛불카페 회원들의 참가도 눈에 띄었다. 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수원 영통 지역구)가 한나라당과 타협하자 항의방문을 하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남경필, 김진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팻말시위를 했다.

날치기 통과 직후에는 한나라당 경기도당 앞에서 한나라당의 장례식을 치렀다. 이후 소식은 http://cafe.daum.net/swnomadcow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2백 회를 훌쩍 넘어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 수원 촛불처럼, 한미FTA 폐기 운동도 “될 때까지 모이자.”

김진석

대전

박근혜·한나라당에 대한 분노를 보여 주다

한미FTA가 날치기 통과된 22일 대전지역에서도 촛불이 켜졌다. 급하게 집회가 결정됐음에도 시민 50여 명이 대전역에 모였다.

캠핑에서의 분노도 다음 날 확인할 수 있었다. 대전지역 대학생들 20여 명이 강연자 대전대를 방문한 박근혜에 항의하는 집회를 연 것이다. 대전대 학생 1백여 명이 집회 장소 인근에서 박수치며 집회를 응원해, 날치기 통과와 박근혜에 대한 분노를 보여 줬다.

심지어 이들은 박근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둘러싸며 박근혜의 강연장 출입을 막아서 기까지 했다.

대전지역 촛불집회는 나날이 규모가 늘어, 25일에 대전역에서는 1백여 명이 넘게 모였다. 2008년 촛불의 주역이었던 고등학생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26일에는 대전 변화가인 으능정이 거리로 자리를 옮겨 집회를 가졌고, 집회 후에는 한나라당사로 가서 항의했다. 당사로 가면서 시위대는 대전의 변화가를 휘저으면서 구호를 외쳤다. 중간중간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외침에 호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일 모일 것이다.

윤승훈·정계승

전주

한나라당 당사 진입 투쟁

한미FTA를 날치기한 22일, 전주에서는 분노한 시위대가 한나라당 전북도당 당사에 진입했고,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 다음 날은 낮 시간임에도 1백 50여 명이 한나라당 당사 진입을 시도했다. 이 때문에 활동가 16명이 경찰에 소환되기도 했다. 나도 그중 한 명이다.

한미FTA반대전북대책위(이하 대책위)는 대표자회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고,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다.

11월 25일 전주 오거리에서 열린 촛불시위에는 2백여 명이 모였다. 전주의 활동가들은 12월 3일 전국적으로 열릴 민중대회에 전주 지역에서 최소한 2천 명 이상을 모으자고 결의했다. 많은 대책위 소속 단체들은 이번 촛불을 2008년 촛불처럼 활력있는 운동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책위 회의에서 좌파 단체들이 한미FTA 폐기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며 단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병무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공개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다함께 서울 동부 공개토론회

국제 점거 운동과 21세기 반자본주의

연사: 김인식 (다함께 활동가)

일시: 12월 8일 (목) 오후 7시 30분

※1일 (목)으로 예정했던 공개토론회가 8일(목)로 연기됐습니다.

장소: 서울교육문화센터 602호

(당심리역 4번 출구 도시철도공사 역)

참가비: 3천 원(학생 2천 원)

문의: 070-6877-5533



* 웹사이트에 토론회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다함께 서울 지역 연락처

서울 동부지구

연락처: 02-447-0397 atge@paran.com

http://blog.naver.com/atgetforum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99-13 3층 303호

서울 남부지구

연락처: 02-416-0963 atgsouthmail@jinbo.net

http://blog.naver.com/nambu_forum

서울 송파구 삼전동 7-1 402호

서울 서부지구

연락처: 02-324-3400 west.atg@gmail.com

http://blog.naver.com/atgwestforum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4-14번지 3층

서울 중북부지구

연락처: 02-6338-2395 jballtogether@gmail.com

http://blog.naver.com/atgjbforum

서울 중구 인현동 2가 189-2 201호



한국의 '점거하라' 운동

모이자! 12월 10일 2차 국제 공동 행동의 날

‘월가를 점거하라’ 운동이 호소한 10월 15일 국제 공동 행동의 날에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무려 82개 나라 1천5백여 개 도시에서 시위가 열렸다.

전 세계 노동자·민중은 1퍼센트 부자를 위해 99퍼센트에게 경제 위기의 고통을 떠넘기는 현 경제 시스템이 잘못됐고 그것을 바꾸고 싶다는 공통된 염원 아래 단결했다. “1퍼센트에 맞서는 99퍼센트”가 이 운동의 주요한 구호가 됐고, “기업의 탐욕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가 우선하는 체제”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 운동이 반자본주의 운동임을 보여 준다.

한국에서도 반자본주의 정서는 계속 자라나고 있었다. 룬스타의 먹튀나 저축은행 부도 사태와 관련된 금융자본의 탐욕과 비리는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단지 금융자본에 대한 반감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2008년 촛불시위에서는 단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뿐 아니라 1퍼센트만을 위한 정책을 폐는 이명박 정부에 맞선 다양한 요구들이 쏟아져 나왔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폭로·비판하는 장하준 교수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이런 반자본주의 정서는 10월 15일 국제 공동 행동에서 운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랍 혁명과 유럽의 긴축 반대 운동에서 시작된 반자본주의 운동은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미국으로 매우 빠르게 확대됐고, 전 세계적인 반자본주의 운동의 성장이 한국 운동을 고무한 것이다.

‘Occupy(오큐파이)’ 서울 국제 공동 행동도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이명박 정부는 시청 광장을 봉쇄하며 집회를 가로막



10월 22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Occupy 서울’ 2차 대회 급진적 열기가 넘쳐나는 ‘점거하라’ 운동은 한국의 운동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았지만, 10월 15일 대한문 앞에서 1천여 명이 참가한 ‘Occupy 서울 국제 행동의 날’ 시위가 열렸다.

디딤돌

집회는 매우 급진적인 열기로 넘쳤다. 집회 참가자들은 “자본주의는 고장 났다”, “1퍼센트에게 세금을, 99퍼센트에게 복지를” 등의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스페인에서 온 청년들도 “그리스 노동자 투쟁을 지지한다”, “혁명이 유일한 해법이다” 등의 구호를 쓴 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가했다.

10월 22일 시청광장에서 열린

‘Occupy 서울’ 2차 대회에도 다양한 사회단체, 진보 정당, 노동조합, 학생단체 등이 앞서 열린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치고 참가했다.

‘점거하라’ 시위는 한국 운동의 성장에 큰 디딤돌이 됐다. 특히 “1퍼센트만을 위한 한미FTA 반대한다”, “1퍼센트에 맞선 99퍼센트, 우리가 대안이다”는 구호를 유행시키며 한미FTA 반대 운동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민주당의 오락가락에 영향받아 다소 침체돼 있던 한미FTA 반대 운동에 새로운 자극과 활기를 가져다 준 것이다. 한미FTA 반대 운동은 ‘Occupy 서울’ 집회를 디딤돌 삼아 박원

순 당선 이후 사기 고조를 이용해 크게 전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점거하라’ 운동이 한미FTA 반대 운동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경제위기 고통전가에 맞서며 경제 위기를 낳은 자본주의 자체에 반대하는 운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위기와 고통전가 속에 이에 맞선 저항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한국의 운동에도 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우파와 기성 언론들의 왜곡·축소와 달리 이 운동을 촉발시킨 미국의 ‘점거하라’ 운동은 계속 심화하고 있고, 그리

스·이탈리아 등에서는 긴축에 반대하는 운동이 성장하면서 긴축을 추진한 정부들을 무너뜨렸다. 영국에서는 11월 30일 수백만 명이 참가하는 공공부문 파업이 벌어진다.

또, ‘월가를 점거하라’ 시위에 영감을 준 이집트 민중은 혁명의 상징인 타흐리르 광장을 다시 점거하고 군부 퇴진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도 우리는 ‘점거하라’와 같은 국제주의적 반자본주의 운동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1천만 원에 이르는 대학 등록금, 물가폭등, 전세 대란, 공공요금 인상, 실업률 폭등 등으로 노동자·민중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특히 반자본주의 좌파는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점거하라’ 운동에 연대해야 할 뿐 아니라 이 운동의 영감을 한국에도 알리며 반자본주의 운동을 발전시킬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제주의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좌파가 이 운동을 건설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면서 ‘점거하라’ 운동을 성장시켜야 할 좌파의 어깨가 무겁다.

우선 12월 10일 ‘Occupy 서울’ 국제 공동 행동 건설에 주력하고, 계속해서 전 세계 운동과 연대하며 한국의 운동을 더욱 발전시키자.

강동훈

‘Occupy 서울’ 제2차 국제 공동 행동의 날
일시: 12월 10일(토) 오후 4시
장소: 서울 대한문
주최: 99퍼센트 행동 준비회의

‘월가를 점거하라’ 운동 활동가가 말한다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레이아 페티 교사이자 ‘월가를 점거하라’ 운동의 노동 진출 위원회 활동가

“시장과 경찰들은 우리를 쫓아내려고 모든 수단을 썼습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우리를 모함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99퍼센트 대 1퍼센트라는 메시지가 워낙 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들은 다른 수단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를 해야 하니 자리를 비워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즉각 점거장소를 청소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조가 청소 도구를 기증했습니다.

AFL-CIO(미국노총)는 점거하라 운동을 방어할 것을 조합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새벽 5시에 수천 명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경찰에 맞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다시 와서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우리 캠프를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텐트를 찢었고 우리의 모든 것을 트럭에 집어 던졌습니다. 활동가 수십 명을 연행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공원에서 쫓겨났지만 11월 17일 항의 시위가 성공을 거두게끔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7일 시위는 지금까지 우리가 벌인 시위 중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3만 5천 명



이 참가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뉴욕 증권거래소 입구를 봉쇄했고 주식 중개인 수백 명이 입장하지 못했습니다.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입장하지 못한 중개인들을 위해 핫라인을 개설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점심에는 지하철을 ‘점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차를 타고 칸을 이동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사람들과 애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학생 5천 명이 학교문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노동조합원들이 대거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아 모두가 풀리 공원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근 도로들까지 점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고 외치며 브록클린 다리까지 행진했습니다. 감격스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원을 점거하는 것만으로는 목표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정부, 은행과 1퍼센트 세력을 바꾸려면 우리는 주거지, 작업장과 학교로 활동반경을 넓혀야 합니다. 이 작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점거한 공원은 운동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운동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는 이미 분임 토론들을 노조 사무실 등 실내에서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구호를 채택했습니다. “너희는 때를 만난 사상을 쫓아낼 수 없다.”

지난 두 달 동안 미국 노동계급은 자신감과 전투성에서 지난 20년 동안 이룬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점거하라’ 운동 덕분에 이제 미국 사회에서 계급이 중요한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99퍼센트다”, 이 구호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공통의 언어를 제공했고, 활동가들은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연대의 정신이 탄생했습니다.

영국에서 곧 총파업이 벌어질 것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미국에서도 총파업을 벌일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간 **마르크스21** 이론과 실천의 통일

11호 2011년 가을
가격: 16,000원

특집 알렉스 캘리니코스 2011년 방향 강연
오늘의 정치 전망과 혁명적 전략·전술
자본주의의 대안
제국주의와 국제 정치경제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의 의미

쟁점 I
통합진보정당과 국민참여당 _ 김하영
금융 위기와 민스키 _ 이정구
발전국가론과 한국의 산업화 _ 강동훈

쟁점 II 인종차별과 다문화주의의 변모하는 인종차별 _ 리처드 시모어
문화와 다문화주의 _ 캐리슨 켈렌스

세계관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와 생태학 _ 김중환

마르크스주의의 고전 읽기
VI 레닌의 《국가와 혁명》 _ 차승일

서평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
지역 대안론의 의미와 한계 _ 정병호

피드백 사노위 실패의 교훈과
혁명당 건설 투쟁의 연속성 _ 이형로

구독 문의 | 전화 02-2268-7608, 이메일 marx21@marx21.or.kr, 웹사이트 http://www.marx21.or.kr
알라딘, 예스24, 인바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처는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정기구독료 1년 64,000원 | 2년 120,000원 | 3년 180,000원 |
5년 300,000원 | 7년 420,000원 | 10년 600,000원

《마르크스21》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지지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웹사이트(www.marx21.or.kr)에서 휴대문 결제, 계좌 이체, 신용카드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